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2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02. 12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0194
등록일: 2002년 12월 30일
기타:

대한민국정부

본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음.

목 차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	1
1. 목표 및 방향	3
2.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6
3. 2002년도 예산편성방향 및 규모	11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5
1. 협동조합 개혁	17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23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31
II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39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41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51
3.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65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67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78
6. 친환경농업의 육성	86
7. 농어가 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93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시책	113
1. 쌀산업	115
2. 채소·원예산업	118
3. 축산업	120
4. 임업	131
5. 수산업	144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49
1. 기초생활환경 개선	151
2. 교육여건 개선	154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157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158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방향

우리 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시장개방으로 공급여력이 증가한 반면에 수요 정체로 농산물 과잉기조가 진행되어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형태가 다양화, 고급화되고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농산물 유통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도·농간의 소득 및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생산기능 외에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다면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량안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및 지역사회의 유지·보호 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으로 시장개방 폭이 넓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가입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중국농산물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역주의의 확산과 심화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투자 유인 효과의 증대를 위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개방과 경쟁」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시장지향적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지·노동·자본이 핵심 생산요소였던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기술이 핵심 생산요소로 중요시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부문도 정보화기술과 첨단생명공학을 생산·유통 과정에 폭넓게 접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농업·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하에 2002년의 농정시책을 추진해 가고있다.

첫째, 민생안정 차원에서 농업인들이 당면해 있는 소득불안 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쌀 값 안정,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

둘째,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농업인 육성, BT·IT산업의 접목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생산과 유통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모이도록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넷째, 금년부터 본격화되는 WTO 농업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당사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임업은 반세기에 걸쳐 추진해온 산림계획에 의거 성공적으로 녹화된 산림을 숲 가꾸기를 통해 가치있는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난개발 방지 등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림휴양 공간을 확충하며 산촌진흥에 노력하는 등 사람과 숲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2년도 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수산물 유통구조의 개혁 및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근간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업이 처한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특히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수산업 전반의 구조를 재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산발전 시책을 통해 어장의 축소와 자원의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수산업이 중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가고자 한다.

첫째,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어업인의 건전한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선, 자원수준에 적합하게 연근해 어선세력을 조정하는 한편, 수산자원의 조성, 기르는 어업의 육성 등으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둘째, 어업인의 조직화와 의식개혁을 통한 자율관리 어업체제의 구축으로 어업인이 자원관리 및 생산량 증대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어촌·어항·어족자원의 관광자원화로 어업 및 어업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세째, 수산물의 직거래 확대,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와 운영합리화 및 수산물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구조를 합리화하고, 수산물검사 인력과 장비보강, 이에 따른 제도의 개선으로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며

넷째, 공적자금 지원을 계기로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자본잠식 등 부실화된 일선수협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등으로 어업인 단체를 집중 육성하며 어업인 경영자금 지원 및 경영부담 완화를 통하여 어업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다섯째, 어업인 후계자 등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인 정보화 교육 강화를 통하여 어업경영을 다변화하며, 첨단수산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의 적극 투자로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시책을 중점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가. 농업·농촌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2001년도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의한 투융자는 국고기준으로 7조 200억원이며,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8조 9,690억원이 집행되었다.

국고 투융자 실적 7조 200억원은 당초 2001년도 농업·농촌발전계획상의 6조 1,868억원보다 8,332억원 많은 수준이다. 이는 기금사업 등의 계획변경,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 농신보기금출연 및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확대에 따른 것이다. 지방비는 계획대비 165.2%인 1조 3,035억원을 지원하였다.

지방비 집행액이 당초계획을 초과한 것은 경지정리사업의 지원단가 상승에 의한 지자체 부담증가와 농어촌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사업 등의 계획 변경에 기인한다. 자부담 지원은 계획대비 153.2%인 6,4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농업인 자율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2001 투융자 계획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계 획 (A)	집행실적(B)	대 비 (B/A)
계	73,973	89,690	121.2
국 고	61,868	70,200	113.5
지 방 비	7,891	13,035	165.2
자 부 담	4,214	6,455	153.2

분야별로는 국고투융자 7조 200억원 중 영농기반정비, 농지정비 및 관리 등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확충 분야에 2조 5,013억원(35.6%), 부채대책, 농업인부담경감 등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분야에 1조 4,909억원(21.3%), 농업경영종합자금, 교육·훈련 등 농림업경영체 육성 분야에 1조 226억원(14.6%), 산지·소비지 유통시설확충 및 농림수산물 수출기반조성 등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분야에 9,778억원(13.9%),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에 7,583억원(10.8%), 기술개발, 정보화지원 등 농림업부가가치제고 분야에 2,691억원(3.8%)이 집행되었다.

〈2001년도 국고투융자의 사업 분야별 내역〉

(단위 : 억원)

	계획(A)	집행실적(B)	대비(B/A)	비중(%)
계	61,868	70,200	113.5	100.0
농림업 공익적기능 확충	21,223	25,013	117.9	35.6
건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	11,244	10,226	90.9	14.6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2,629	2,691	102.4	3.8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11,414	9,778	85.7	13.9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9,047	7,583	83.8	10.8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6,311	14,909	236.2	21.3

사업주체별로는, 주로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생산기반확충, 정보화, 기술개발, 친환경 경, 농신보기금출연사업 등 정부직접사업 및 SOC사업은 당초계획에 비해 증가한 반면, 농업인후계자 지원, 농기계구입자금, 영농규모화사업, 협동조합유통활성화 사업 등 융자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대상사업은 감소하였다

(단위 : 억원)

	계 획 (A)	집행실적(B)	대 비 (B/A)
계	61,868	70,200	113.5
- 보조	41,316	52,661	127.5
- 융 자	20,552	17,539	85.3
- 농업인	14,945	13,643	91.3
- 생산자단체등	9,329	9,275	99.4
- 정부사업	14,880	18,984	127.6
- SOC사업	22,714	28,298	124.6

국고지원 내역별로는, 일반·특별회계예산을 통해 5조 9,176억원을 지원하여 계획대비 110.6% 달성하였으며, 농지기금,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 농업관련 기금에 의해 1조 1,024억원을 지원하여 계획대비 132%달성하였다. 이는 서남해안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과 축산농가경영여건개선, 축협조합경영활성화지원 등의 계획변경에 의한 사업확대에 따른 것이다.

(단위 : 억원)

	계 획 (A)	집행실적(B)	대 비 (B/A)
계	61,868	70,200	113.5
- 예 산	53,514	59,176	110.6
- 기 금	8,354	11,024	132.0

품목별로는, 국고집행액 7조 200억원 중 생산기반정비, 영농규모화, 농업기계화 등 쌀 관련 분야에 2조 6,907억원으로 38.3%을 지원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농가경영여건개선 등 축산분야에 5,461억원(7.8%), 산림자원 확충 등 임업분야에 3,119억원(4.5%), 원예 특작에 1,137억원(1.6%) 순으로 집행되었다. 당초계획에 비해 원예특작, 임업 등 개별 품목에 대한 투융자 비중은 줄어든 반면, 생산기반정비, 기술개발, 직불제, 생활환경개선 등 품목 공동 투융자 분야의 지원비중은 증가하였다.

(단위 : 억원)

	계 획 (A)	집행실적(B)	대 비 (B/A)
계	61,868	70,200	113.5
- 쌀	22,211	26,907	121.1
- 원예 특작	3,312	1,137	34.3
- 축산	4,453	5,461	122.6
- 임업	3,427	3,119	91.0
- 기술개발, 직불제 등 기타	28,465	33,576	118.0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따른 투융자계획(1999-2004)〉

(단위:억원)

	총투융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 타
합 계	450,526	378,384	47,169	24,973
1.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149,663	130,593	15,290	3,780
○ 재해에 대비한 영농기반 정비	50,884	50,854	300	-
○ 농지의 정비 및 관리	62,103	53,336	8,767	-
○ 친환경 농림업의 육성	14,312	11,795	1,859	658
○ 산림자원의 확충	22,364	14,878	4,364	3,122
2. 건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	77,811	71,927	1,986	3,898
○ 교육 및 훈련	9,080	8,936	144	-
○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지원	45,628	45,468	160	-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23,103	17,523	1,682	3,898
3.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18,063	15,842	1,579	642
○ 첨단 농림업기술 개발	14,449	12,556	1,578	315
○ 농림업의 정보화 지원	1,057	947	-	110
○ 농림업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2,557	2,339	1	217
4.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87,142	67,959	5,118	14,065
○ 산지 유통기반 조성 지원	48,826	37,733	351	10,742
○ 소비지 유통기반 조성 지원	11,211	7,283	3,071	857
○ 물류체계, 정보·교육 지원	5,311	4,749	161	401
○ 농산물 가공산업의 지원	1,169	838	-	331
○ 소비자보호의 강화	2,365	1,981	360	24
○ 축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6,628	6,346	33	249
○ 임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4,169	2,850	282	1,037
○ 농림수산물수출기반 조성 지원	7,463	6,179	860	424
5.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의 증진	81,304	55,520	23,196	2,588
○ 농촌의 다양한 산업 유치	19,965	13,290	5,009	1,666
○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지원	41,404	26,741	14,663	-
○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19,935	15,489	3,524	922
6.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36,543	36,543	-	-
○ 농업자금의 원활한 공급 지원	26,488	26,488	-	-
○ 농업인의 부담경감 지원	10,055	10,055	-	-

나. 수산업·어촌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1) 2001년도 수산업·어촌 투융자 집행내역

2001년도 수산업·어촌투융자 실적은 국고기준 9,313억원이며, 2000년에 비해서도 1,09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제1단계(1992~1998) 농어촌 투융자 비행실적의 연평균 5,361억원에 비해서는 3,952억원 증액된 것으로서 대폭 증가된 것이다.

이는 수산부문의 예산중 국제규제에 의한 어선감척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어업인 경영자금 지원 확대 및 어가부채경감 특별대책에 따른 이차보전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단계(1992~1998) 농어촌 투융자 집행실적의 연평균 5,361억원에 비해서는 2,225억원이 증가하였다.

기능별로 보면 어업인의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3,482억원(37.4%), 어항시설등 기반시설 조성 2,259억원(24.3%),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2,619억원(28.1%), 수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 953억원(10.2%)등으로 집행되었으며, 한계에 이른 잡는 어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르는 어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한일 어업협정 체결 등에 따른 어장의 축소로 어려운 어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에 밀려 투자가 미흡한 상태이다.

(2) 투자효율성 제고 방안

수산사업실시요령을 개정하여 수산사업의 평가·사후관리 및 환류체계를 보장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 및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성과가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되도록 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업이나 평가체제가 구축되지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토록 규정을 강화하는 등 수산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2002년도 예산편성방향 및 규모

가. 2002년도 농림예산 편성방향

2002년도 농림예산은 IMF로 인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수확기 쌀값안정대책 예산 집중 지원, 농가소득안전망 확충, 농가소득원 적극 개발 및 매년 반복되는 재해예방과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농업기술개발과 농업·농촌정보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첫째, 수확기 쌀값안정을 위해 양곡수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과 정부수매, 농협시가 매입 등에 필요한 지원과 정부보유벼 공매중단 등에 따른 양특회계 세입 감소분 지원을 위해 양특회계의 한은차입 한도를 대폭확대 반영하였다.

한편,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매입여력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개소당 운영자금 확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금리를 무이자로 하는 이차보전예산을 반영하였다.

둘째, 농가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농가소득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논농업 직불제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불제 도입기반 마련과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였으며, 농외소득원 확충 일환으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셋째, 농산물의 유통개선부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유통의 하드웨어(시설) 부문은 신규투자를 줄이는 한편, 농업관측사업, 유통활성화사업 및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 등 소프트웨어(운영) 중심의 투자 예산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넷째, 가뭄과 호우 등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배수개선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는 한편, 기반이 어느 정도 확충된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필요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기술개발예산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촌에 PC보내기 운동과 함께 5,000대 분량의 중고 PC수리비용 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정보화촉진기금에 8만명의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

한편, 경쟁력 있는 선도적 경영주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계 학교 졸업자 등 창업농 인원수 확대와 1인당 지원규모 인상을 통해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에 주력하였고,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대폭 확대 반영하였다.

나. 2002년 농림예산 규모

2002년도 농림부문 예산은 총 9조 2,851억원으로 2001년 보다 5.4%증가되었으며,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2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감	
				(B-A)	%
기 능 별	○생 산 기 반 조 성	21,908	21,515	△393	△1.8
	○농 업 기 계 화	2,623	1,940	△683	△26.0
	○생 산 및 유통 개선	10,834	8,341	△2,493	△23.0
	○기술 개발 및 정보화	2,250	2,580	330	14.7
	○인 력 육 성	2,855	2,774	△81	△2.8
	○농 촌 소 득 원 개 발 등	2,743	3,633	890	32.4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	32,649	38,007	5,358	16.4
	○양 곡 지 원	7,813	9,969	2,156	27.6
	○공 공 근 로 사 업	1,239	721	△518	△41.8
	○기 본 적 경 비	3,186	3,372	186	5.8
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포함)		88,100 (92,777)	92,852 (94,502)	4,752 (1,725)	5.4 (1.9)
양 곡 관 리 특 별 회 계		11,586	12,382	796	6.9
농 특 세 관 리 특 별 회 계		2,162	1,849	△313	△14.5

〈2002년 농림예산 사업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감 (B-A)	%
1.	생산 기반 조성	21,908	21,515	△393	△1.8
2.	농림 기계화	2,623	1,940	△683	△26.0
3.	생산 및 유통 개선	10,834	8,341	△2,493	△23.0
4.	기술 개발 및 정보화	2,250	2,580	330	14.7
5.	인력 육성	2,855	2,774	△81	△2.8
6.	농촌 소득원 개발 등	2,743	3,633	890	32.4
	○ 농촌 소득원 개발 등	1,582	2,462	880	55.6
	○ 생활 환경 개선	874	839	△35	△4.0
	○ 기타 사업	287	332	45	15.7
7.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	32,649	38,007	5,358	16.4
	○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12,151	18,926	6,775	55.8
	○ 채무상환	20,498	19,081	△1,417	△6.9
8.	양곡 지원	7,813	9,969	2,156	27.6
9.	공공근로사업	1,239	721	△518	△41.8
10.	기본적 경비	3,186	3,372	186	5.8
합 계		88,100	92,852	4,752	5.4

다. 2002년도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2002년도 수산분야 예산은 어업구조조정 및 어선설비 현대화, 관리형 어업육성 및 어업경영 지원, 어촌 및 어업의 물적·기술적 기반 확충, 유통구조개선·가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여

첫째, 어업구조 조정으로 국제어업질서 개편에 적극 대응하고, 노후어선의 시설을 대체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둘째, 「관리형 어업」육성으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장환경개선 및 자원조성,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과 경영부담 경감, 어업인의 육성 및 어업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셋째, 종합어항 및 선진형 어촌개발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품질 수산기술 연구로 어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넷째, 수산물 유통의 체계적 계열화 및 하역화·표준화를 도모하고, 현대화된 수산가공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수산품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추진, 수산물 해외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예산의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 △ 감	
					(%)
분	○ 어업 구조조정 및 어선 설비 현대화	2,619	1,194	△1,425	△54.4
	- 국제규제 어선감척	2,368	913	△1,455	
	- 연근해·원양어선감척	177	219	42	
	- 어선설비 현대화	74	62	△12	
	○ 관리형 어업육성 및 어업경영지원	3,482	4,699	1,217	34.9
야	- 기르는 어업 육성	358	444	86	
	- 자원 조성	492	798	306	
	- 기술지도, 자원조사관리	50	113	63	
	- 어업경영 지원	692	1,307	615	
	- 어가부담 경감	1,113	1,067	△46	
	- 조합경영개선자금	435	433	△2	
	- 어업인 육성	242	234	△8	
	- 어업질서 유지	100	303	203	
	○ 어촌 및 어업의 물질·기술적 기반 확충	2,259	2,280	21	0.9
	- 어항건설	1,818	1,777	△41	
- 소득향상 사업	228	247	19		
- 수산기술 연구	213	256	43		
별	○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953	593	△360	37.7
	- 수산물 직거래 기반	167	42	△125	
	- 수산물유통기반 조성	442	311	△131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325	203	△122	
	- 수산물위생안전 관리	9	20	11	
	- 수산물 수출 지원	10	17	7	
계		9,313	8,766	△547	△5.9
재 원 별	일 반 회 계	2,975	3,440	△10	
	농 특 회 계	5,753	4,535	1,154	
	재 특 회 계	477	667	46	
	책 특 회 계	109	127	109	

Ⅱ.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 도 개 혁

Ⅱ.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 개혁

가. 농업협동조합

(1)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 추진

중앙회는 지난해 조직 및 인력운용에 대한 외부 컨설팅 결과에 따라 4개 부서, 집행간부 1명 및 정원 854명을 추가로 감축하였다.

그리고, 대표이사별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임원 및 집행간부의 2002년도 경영협약 체결시 2단계 협동조합개혁 과제를 협약에 포함시켜 2단계 개혁 추진을 제도화하였다.

회원조합의 사업과 경합관계에 있는 유가공공장과 사료공장의 회원조합 이관 또는 자회사화를 적극 추진하여 청양 유가공공장은 (주)매일유업에 매각(5.29)하였고, 안산사료공장은 경기도 관내 9개 회원축협에 이관(9.1)하였으며, 그 밖에 8개 사료공장은 단일 자회사화(8.31)하였다.

또한, 기능은 유사하면서 별도의 자회사로 운영되어오던 (주)농협축산유통을 (주)농협유통에 통합(7.1)하였고, 연수원 등 불요불급한 고정자산도 9월말 현재까지 총 69건(3,723억원)을 매각하였다.

일선조합도 2002년도 중에 지사무소 63개소를 폐쇄하였고 조합합병, 지사무소 통폐합 등에 따른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운영평가자문회의(55개조합), 사외이사제(30개조합), 상임이사제(6개조합) 도입 확대 등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왔다.

(2) 부실조합 구조개선

지난해 9.12일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정부는 동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 2001.12.15일 공포하고, 동 법령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보험요율과 결제성 예금의 범위를 2001.12.22일 고시하였으며, 부실조합 등에 대하여 조치할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2002. 1.29 고시하였다.

〈적기시정조치 기준 및 조치내용〉

구 분	발 동 기 준	경영개선조치 내용
경영개선 권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본비율 0%미만 ○ 경영상태 종합평가결과 평가등급 4등급 ○ 경영상태 종합평가결과 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 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위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경비절감 ○ 지사무소 운용의 효율화 및 신설제한 ○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 ○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의 진출, 신규출자의 제한 ○ 자기자본의 증대 및 이익배당의 제한 ○ 합병권고 ○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 예금금리 수준의 제한 ○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경영개선 요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본비율 -7%미만 ○ 경영상태 종합평가결과 평가등급 5등급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위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조합 ○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의 직무정지 ○ 조직·인력의 축소 ○ 지사무소의 폐쇄·통합 ○ 사업의 일부 정지 ○ 합병요구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신용사업 등에 관한 계약의 이전계획 수립·추진 ○ 경영개선권고에 의한 조치사항
경영개선 명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본비율 -20%미만 ○ 예금등의 지급,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경영개선계획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의 직무를 대항할 관리인의 선임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합병명령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 경영개선요구에 의한 조치사항

한편, 동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는 농축협조합장, 농민단체, 정부, 국회, 학계 등 각계대표로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 2002.1.8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하고, 2002년도 기금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안)을 심의하였다.

정부는 조합의 부실정리를 위한 제도와 체제가 모두 갖추어짐에 따라 2001년도 결산결과와 경영상태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실(우려)조합을 분류하여 2002년도 조합구조개선계획을 수립, 3.26일 개최된 제3차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4.10일 조합별로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사항을 통지하였다.

각 조합에 통지한 적기시정조치사항은 크게 합병과 재무구조개선으로 구분되는데, 총 197개 부실(우려)조합중 71개 조합에 대하여 합병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였고, 나머지 126개 조합에 대하여는 재무구조개선을 권고 또는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합병권고·요구·명령 대상조합에 대하여는 인력감축, 지사무소 폐쇄, 출자금의 감액 등의 합병이행요건을 부과하고, 재무구조개선 대상조합에 대하여는 순자본비율 등 재무비율 개선, 지사무소 통폐합 및 불용자산 처분 등 재무구조개선 조치,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경영합리화 조치 등을 권고 또는 요구하였다.

한편, 합병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조합중에서 25개 조합이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합병을 유예하였다.

이와 같은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11.12일 현재 합병대상 46개 조합중 20개조합이 합병을 완료하였고, 25개 조합이 합병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무구조개선 대상 126개 조합중 78개 조합이 기금관리기관장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체결을 완료하고 자금지원을 신청하였고, 13개조합은 자금지원신청을 포기하고 자체 정상화를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조합의 부실자산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협자산관리회사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2002.8.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8.6일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지사를 설치하여 10.1일부터 채권추심 등 업무를 개시하였다.

(3) 농업금융개혁

2000년 11월 「농업금융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개혁내용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일선조합의 상호금융 및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일선조합의 상호금융 신규대출금리는 2001년 12월 8.66%이던 것이 2002년 8월 7.56%로 1.1% 포인트 인하되었고, 신규대출금리가 11% 이상인 고금리 운용조합에 대하여 특별 지도를 실시하여 고금리조합 수가 대폭 감축(2001.12월:172개 → 2002.8월:24개조합) 되었다.

시중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 등 37개 정책자금의 금리도 5.0%에서 4.0%로 추가 인하하여 농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였다.

나. 산림조합

2000. 5. 1자 산림사업을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조합으로 체제를 개편하면서 산주와 산림경영자를 위하여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예산 신청 등 산림사업 일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수행하여 왔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위탁받은 사업수행과 산림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산림사업시행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산림조합은 기존의 고유사업과 함께 대리경영·공제사업·산촌개발·장비임대차·장제사업 등 사업영역을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기술·자료·노동력이 부족하여 직접 산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들을 위해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산림조합에서 산림사

업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대신 경영해주는 대리경영사업을 대행해 줌으로써 산주는 계획적인 산림관리가 가능하고 소유산림의 자산가치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2001까지 : 168천ha → 2002계획 : 218천ha)

또한 산주나 산림경영자들에게 임업기술지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리 경영 계약체결 실적, 산주지도활동 등 기술지도실적을 종합하여 임업기술지도원의 인건비를 성과위주방식으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2001 : 10억원 → 2002 : 15억원) 그리고, 산림조합 육성자금의 지원을 확대(2001 : 144억원 → 2002 : 251억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융자지침을 개선하여 각종 산림사업을 적기 집행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종합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산림조합의 건전한 경영 및 자립촉진을 위한 경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업기술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산림청훈령 제726호, 2001. 4.26)하여 현장위주의 기술지도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임업기술지도원의 지도실적을 전산화하여 모든 조합임직원 및 산주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65년부터 발간하여 배포한 산림지를 DB화하여 산림경영지가 필요로 하는 임업기술·정보 등을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임업기술의 전산화를 연내 실시하게 되었다. (2002년도 국고예산지원 : 230백만원)

앞으로 산림조합의 임업기술지도원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컨설턴트 요원으로 양성 전문기술을 축적코자 임업연구기관, 임학관련대학교, 선도임업인 등과 연계된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일선 임업기술지도원에 대한 교육과 기술을 축적시켜 나가며 임업기술지도원을 연차적으로 증원배치(2002 : 787명 → 2007까지 : 1,277명)하고 인건비 국고보조를 현실화(2002 : 50% → 2005 : 80%)하여 임업경영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으로 임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도적인 임업경영주체로 육성시켜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 수산업협동조합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과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수협이 어업인의 자조조직이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2000. 1월과 12월에 1·2차 수협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강력한 독립사업부제 확행을 전제로 정부에서 2001. 4.26에 11,095억원, 2001.12.31에 486억원, 총 1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공적자금의 지원을 계기로 2001년도에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75억원의 흑자를 실현함으로써, 수협 경영정상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을 2001. 2월 마무리하여 인력 39%(1,165명) 감축, 부서 16개(28→12개) 축소, 9개 도지회 전면폐지, 자회사 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아울러 2001. 5월에는 「뉴스타트 수협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1년도에 실현된 흑자경영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와 함께 어업환경 악화와 IMF이후 건전성 기준강화 등으로 경영이 부실하게 된 회원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해 2000. 9월 부실조합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감축, 부실사업장 폐쇄, 고정자산 매각, 부실채권 감축 등 구조조정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무이자 경영개선자금을 2000년도에 535억원, 2001년도에 435억원 지원에 이어 2002년도에 3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02년부터는 부실화된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선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일선수협이 책임경영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호금융자금융자보호기금의 확대를 통한 일선수협 경영지원 확대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산물유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이 확충되어 농산물의 표준규격출하율과 공동출하율이 증가되고 선진적인 거래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유통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시장의 변화와 농산물 수급불안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지의 준비태세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유통경로별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대형할인점의 급속한 증가, 소비의 고급화·다양화, 농산물의 과잉 공급구조 등 농산물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유통개혁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생산계획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농업관측 대상품목을 2001년 24개 품목에서 26개 품목으로 늘렸고 관측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농가 10,700호 선정 및 모니터 요원을 1,0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 과학적 선진 관측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하고 있다.

또한, 노지채소 위주로 시행해 오던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시설채소까지 확대하였으며,

최저보장가격제 대상품목을 2000년 10개 품목에서 2002년에는 12개 품목으로 늘렸고, 최저보장가격 산정기준도 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폭락 시에도 수급안정시책 참여농가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하고 있다.

과실에 대해서도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자단체의 시장 대응력 향상 등 과실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2001년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과실계약 출하사업을 처음 도입한 후 2002년에는 단감을 추가하였으며, 대상품목과 계약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계약출하사업 참여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등 계약출하사업을 과실수급안정을 위한 핵심제도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2) 산지유통전문조직중심의 규격농산물 출하체계 구축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표준규격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소비지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영농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의 조직화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유통참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모화·전문화된 일선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을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하여 생산단계부터 상품화·유통단계까지 영농지도, 수확후 품질관리, 공동출하·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예산을 2001년 2,500억원에서 2002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앞으로도 산지유통전문조직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지속하여 농산물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유통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수익성 제고 및 산지유통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채소생산량의 11% 수준을 계약재배하여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산지 협동조합에 계약재배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자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토록 하고, 조성액에 대응한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평가를 통해 잘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조직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채소·과일 산지유통센터를 2001년 196개소에서 2002년 204개소로 확대하였다. 앞으로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부터 선별·포장·브랜드화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3)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토록 하여 생산자·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목표아래 정부는 다양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2002년중 광역직거래장터 46개소를 운영하고, 중소 도시에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파머스마켓(농민시장) 21개소를 지원하여 그중 18개소를 개장·운영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할인점 등 민간대형유통업체와 농업인, 산지유통센터, 종합 유통센터 등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업체에게 직거래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소비자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거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협동조합과 산지 생산자단체와 연계, 농산물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거래를 통해 2001년 7조7,770억원에서 2002년에는 9조5,000억원으로 농산물직거래를 확대하고, 직거래 비중도 23%에서 30%로 늘려나갈 것이다.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그 동안 도매시장 위주의 농산물 유통에서 벗어나 농산물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예약·주문거래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2001년까지 9개소

를 개장하였으며, 2002년 중 1개소를 추가 개장하였다. 종합유통센터는 유통단계축소 뿐만 아니라 파렛트 출하를 통한 하역기계화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선진유통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운영중인 종합유통센터는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운영주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개장 4년차인 2001년도에 2조57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농산물전용 판매시설로 정착되어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지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유통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산지 생산자조직을 종합유통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할인점·판매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판매가맹점으로 확보토록 유도하기 위해 매취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 가맹점과의 전자상거래(EDI)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5)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및 도매시장의 운영방식 개선

종합유통센터와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농산물의 대부분은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은 유통개선대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시설여건·거래액 등을 감안하여 지방·신설도매시장 중심으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이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당분간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경매를 의무화하여 기준가격 형성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매시장을 경유하더라도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출하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역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중도매인의 진·출입을 확대하여 경매참여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도매단계에서의 유통비용을 줄여가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전자경매는 2001년말 현재 23개 도매시장 63개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경매를 도입·운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중 9개를 도입하는 등 2004년까지 전체 도매시장법인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농산물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호도가 높은 중·상급 품에 대한 경락가격이 높게 형성되도록 하여 상급품의 출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출하자의 수취가격 보장 등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경매와 관련하여 시장관계자 등에 대한 경락가격 실시간 제공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 육성의 기본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유통효율화를 위해서는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출하체계개선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2000년도 국가물류비 85조원은 국가GDP 522조원 대비 16.3%에 달하며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과 비교시 높은 편임(미국 9.9%, 일본 9.6%). 농산물의 경우도 물류비 6.9조원은 생산액 31.8조원 대비 21.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류와 같이 부피가 크고, 부패가 쉬울 뿐만 아니라 인력에 의해 상·하차되는 농산물의 경우 물류비가 높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농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고, 판로도 확보할 수 있다.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농산물이 포장 및 파렛트로 적재되어 출하되고, 소비지에서의 하역기계화 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고 있다.

우선,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내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인상을 추진하는 등 포장품과 비포장품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요농산물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90%이상이 되고 소비자 구매 패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농산물의 포장출하율이 향상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하역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하역기계화 장비 보급 뿐만 아니라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기기공동이용시 임차료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물류기기 구입시 보조40%, 용자30%이며 물류기기 임차시에는 임차료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식생활 보장

농산물의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소비자의 신뢰와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원산지관리 및 품질인증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농산물인증제,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55천건의 농산물에 대하여 불시에 집중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성 조사과정에 소비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안전성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농산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있다. 2002. 7월부터 안전성조사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 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 역할 강화를 통해 안전성 확보와 국내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산지 상습위반지에 대한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품질인증 기준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준이나 표준 규격의 최상등급으로 조정하는 등 품질인증제도를 내실화하고 있으며,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 안전 농산물의 생산·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나.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WTO체제 출범 이후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등 임산물의 수입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통기반시설 확충과 품목별 전문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산물 생산, 유통, 소비량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가 가깝게 연결되도록 권

역별 임산물 유통시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총112개소(임산물직매장 95, 목재집하장 17)의 임산물 유통시설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였다.

2002년도에는 출하조절 및 생산자 소득제고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60개소를 지원하고,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임산물생산자 직판장시설 2개소를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설치하여 산지 유통시설과 소비지 유통시설을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산지에서 소량·분산 생산되는 임산물을 대단위 권역별로 수집·저장·선별·가공·포장 등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생산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1997년도에 준공한 여주임산물종합유통센터에 이어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에 동해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1999년부터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시설중에 있다.

또한, 밤, 대추, 표고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한 시장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경쟁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지역 특산물을 개발토록 60개 주산단지 중심으로 품목별 기초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자조직에 대하여는 출하조절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산자조직 단위로 지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1997년도에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1998년 6월부터 농림수산유통정보센터 및 산림청 정보망을 통하여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생산량, 가격, 수·출입 동향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한 임업인과 소비자를 위하여 1999년 33개 산림조합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000년 8월부터 임산물전자상거래 전문사이트인 “푸른장터”를 개설하여 임산물전자상거래 시장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부터 2005년까지 임업인 1,000명에게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의 효율성 및 상품성 제고와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임산물 15개 품목에 대한 표준출하규격을 제정·고시하고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출하하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포장 자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으로 브랜드화된 임산물의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다.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수산물은 강한 변질성과 저가 다량 품목으로서 근본적으로 유통상의 취약성을 갖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구조개선이 필요하여 1999년부터 수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수많은 유통개선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거래형태가 농안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거래형태를 일시에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품목과 시장을 제한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즉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패류 품목에 대하여 가락 및 노량진 양대 수산물시장에서 지난 2001년부터 우선적으로 실질경매를 통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구리시장으로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경매제 도입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생산 어민의 직출하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대금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질경매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둘째, 생산자 단체인 수협을 중심으로 직거래 확대를 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통체계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통한 유통구조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

셋째, 수산물 유통정보화를 확대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이미 47개 산지 수협에 대한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가락시장에 수산물 전자경매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광주농수산물도매시장, 산지 수협 위판장, 산지종합 처리시설 등 앞으로 늘어날 유통시설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가. 농림행정 추진조직 개편

(1) 농 릫 부

(가)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를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농림부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의 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의 정원을 직급별에서 계급별로 변경하고,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의 직급별 정원과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자체내부규정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중 재정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자체확보 할 수 있는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장이 초과수입금을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련규정 :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법률 제6666호, 2002.3.2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대통령령 제17637호, 2002.6.25)>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농림부령 제1415호, 2002.6.25)>

(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국 조직정비

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시장개방확대로 정부주도의 축산물수급조정기능이 시장경쟁 원리에 의한 민간자율조정기능으로 전환되는 등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돼지콜레라와 구

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의한 손실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축산물위생 및 가축방역 기능을 보장하는 등 농림부 축산국 일부조직을 재정비 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26호, 2002. 8.24)>

축산물위생 및 가축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축산국의 축산물유통과와 가축위생과의 과명칭을 축산물위생과와 가축방역과로 변경하고 축산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축산관련 환경오염방지 및 축산분뇨처리대책 업무는 이관하는 한편, 가축공제재해대책 등 축산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가축방역과에 방역계 하나를 더 추가하여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축위생과의 축산물위생제도 및 관리업무와 축산경영과의 사료관리업무를 축산물위생과로 이관하여 축산물 및 사료의 위생·품질·안전성관리 업무를 일원화 하였다

(다) 검역수요 증가 및 GMO표시제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 등

농축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 이로인해 검역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동식물검역 기능 및 인력과 GMO 표시제 시행에 따른 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소 확대 등 2003년도 농림부의 소요기구 및 소요정원을 2002.5.14 행정자치부에 요구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GMO 관련인원과 농산물안전성조사 및 사료검정 전문인력을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출장소 증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출장소 신설과 돼지고기 수출검사원, 축산물위생 감시인력 및 축산물 탐지견센타 등의 인력보강
- 국립식물검역소의 출장소 및 지소의 과신설과 수출용목재 열처리에 따른 검역인력 등 보강
- 국립종자관리소의 종자관리 정보화 인력과 품종심사 및 DNA분석을 위한 특수 검정인력 등 보강

(2) 농촌진흥청

(가) 농업생명공학연구 전담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

향후 10년 안에 세계 5위권의 농업생명공학 기술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연구기능을 재정립하고 첨단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생명공학 연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였다. 또한 조직관리와 인사업무의 연계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관리관 소속 하에 행정법무인사담당관실을 설치하였다.

- 농업생명공학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는 생명공학기획조정과를, 소속기관은 농업과학기술원의 생물자원부를 폐지하는 대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을 각각 신설하고 작물시험장, 원예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에 각각 생명공학연구 관련과를 신설하였다.
- 농촌생활연구소를 농업과학기술원 소속으로 개편하여 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 농산물가공이용과를 신설하여 전통식품자원의 개발 등의 업무를 강화하였다.
- 제주농업시험장의 감귤시험장을 폐지하여 제주농업시험장으로 통합하면서 감귤과와 식물환경과를 신설하였다.
- 영농현장중심의 기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에 교육직공무원 9인(교수 5, 조교 4)을 증원하였다.
-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인력 25인, 행정요원 1인, 전산요원 13인, 사서요원 1인을 증원하는 대신 기능직 38인을 감축하였으며 연구사 20인을 연구관으로 직급 격상하였다.
- 총무과의 인사업무를 기획관리관실 소속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이관하여 행정법무인사담당관실로 개칭하였다.

※ 관련규정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532호, 2002. 3. 2),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11호, 2002. 3. 6)

(나) 책임운영기관 관련

농촌진흥청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농업기계화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관련규정 :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등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7638호, 2002. 6. 25),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16호, 2002. 6. 25)

(3) 산림청

산림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산림행정에 대한 신뢰제고와 대국민 홍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2. 9.11.자로 기존의 “행정관리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을 합병하여 “행정법무담당관실”로 개편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공보계”를 “공보담당관실”로 확대개편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산림휴양·문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휴양문화와 도시숲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산림문화과”를 신설하였으며,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소득과의 산림소득계를 사유림지원과로 이관하고 “산림소득과”를 “목재이용과”로 개편하였다.

한편, 임업연구원에 산불진화기술과 산불피해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복구방법 개발 등의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연구과”를 신설하고, 국제적인 식물자원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고유식물자원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생물표본과”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산불·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림항공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3급)하여 “계”단위 업무체제를 “과”(서무과·항공진화과·항공정비과) 단위 업무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최일선 산림행정 담당

자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급(6급 20, 7급 20)을 상향조정하였다.

앞으로 1999. 5.24. 정부구조조정시 폐지된 “산불통제관”을 산불, 산사태 등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관”을 신설하고, 전국 30분 이내 출동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충북지역에 헬기가 계류·배치하도록 “진천항공지소”의 증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림수산 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1) 농업 분야

농축산업의 활성화와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축사업자와 농업인이 직접 관련되는 현장중심의 규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향상과 농업인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1년도까지의 주요정비 실적은 농업관련 민원업무 절차개선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 첨부서류를 감축하였고 주문용 사료첨가제를 축산농가, 협업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폐지 및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고, 매년 실시하는 축산물취급영업자의 위생교육을 신규영업자만 실시토록 개선하였으며, 실제 농업인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농업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농지의 취득 및 농지전용변경허가 절차와 소규모 농지거래제한규모 완화, 생물학적 방제용 동물수입제도 등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2002년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농업분야의 WTO 재협상 등을 앞둔 어려운 대외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회복에 주력하고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농업관련산업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업경영목적 농지소유상한 폐지 및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허용과 주말·건강·취미·체험농장용 농지 비농업인소유 허용 등 농지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농지법 개정안을 2002. 9.25 국회에 제출하였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근 포장농산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던 중량허용오차 및 포장농산물의 의무표시사항 정비를 통하여 생산자의 표준규격출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농산물유통에 편리하도록 농산물유통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지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①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업경영목적 농지소유상한(5ha) 폐지
- ②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허용
- ③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제도 폐지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④ 주말·건강·취미·체험농장용 농지 비농업인 소유 허용
- ⑤ 주말농장사업용지로 임대하는 것을 모두 허용
- ⑥ 소규모 농지취득규제 완화
- ⑦ 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능한 소득·편익시설 범위확대
- ⑧ 농업진흥지역관리제도 보완

〈 농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

- ⑨ 농업진흥지역밖 신고전용 면적 확대
- ⑩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 ①~⑤은 농지법 개정사항, ⑥~⑩은 농지법시행령 개정사항

(2) 산림 분야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민간자율성이 필요하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산림경영의 자율성과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도록 산림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200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대상을 확대하여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요건(산림법시행규칙 제60조 개정)에 보전임지를 일시 전용할 수 있는 대상을 삽입하여 국유림에 둘러싸인 사유림에서 벌채한 산물의 운반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벌채기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완료 하였다.

2002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산지전용관련 인·허가 제도의 개선으로 현행 4종의 인·허가 체계를 2종으로 통합하고, 채석허가 제도의 개선으로 채석허가 자격기준을 제한하여 산림재해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둘째, 사방지의 목적달성 해제기간을 사방사업 시행후 15년에서 10년 경과로 단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방사업법시행령을 개정(2002.3.2)하였다.

셋째, 임도의 타당성평가 및 각종 처분취소에 대한 청문에 대한 권한을 제도의 효율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도, 지방산림관리청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산림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3) 수산 분야

해양수산부문은 1·2·3차 산업이 공존하고 있고, 환경·안전·수산자원보호 및 위생 관련 사회적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성질별로는 해상교통안전 및 어업질서 유지, 선원 및 선박의 안전관리, 유류오염 방지 등 해양환경 보전,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규제, 해운서비스·항만의 건설 및 항만의 입출항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수산물검사 등 식품 위생 관련 규제 등으로서, 특히 해운, 선원, 해양오염 등에 있어서는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수산분야의 규제개혁 중점추진 방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규제를 실시하며, 경제활력 및 기업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수산업으로의 자유로운 진

입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완화 또는 폐지하여 더 이상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총량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1998~2001년도중 총규제 778건중 438건을 폐지하고, 202건을 신설하므로써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켜 해양수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민원인의 편의 증진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업법, 수산물검사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법령을 통합하여 2001년도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하위규정 규제 및 유사행정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규제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유사행정규제 신고센터의 활성화도모, 현장중심·국민중심으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사이버(Cyber) 규제신고 센터를 개설·운영하는 등 규제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수산분야의 경우 2001년도에 주요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보면, 첫째, 연안어업의 종류를 16종에서 8종으로 통합하여 어업활동 범위를 확대해 줌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편의를 도모하였고, 둘째, 2톤 미만 소형어선 및 내수면 어선에 대하여 개조허가를 면제하였으며, 셋째, 홍합·바지락·냉동굴 등 수출수산물에 대하여 의무검사 제도를 폐지하였고, 넷째, 국산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및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하여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해양수산업 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로 민간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향상과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법령 제·개정시 해양수산 행정규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잔여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하여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제신설시 규제영향 분석 등의 철저한 검증으로 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가. 영농규모화 촉진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비농가나,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젊고 유능한 쌀전업농에게 장기저리의 이자(매매: 연리 3%, 임대: 무이자)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영농규모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동 기금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재특회계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결손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규모확대를 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으로 그 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2~3ha 규모의 농가에 영농규모화자금을 집중지원하여 이들 농가가 3ha이상의 쌀 전업농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02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7,367ha, 3,159억원으로 이중 농지매매가 2,912ha, 2,210억원, 농지임대차가 4,365ha, 886억원, 농지교환·분합이 90ha, 6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각 시·도별 농업진흥지역면적, 쌀전업농수, 2002년 사업신청액, 전년도 집행실적, 농지가격등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많고 쌀전업농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규모확대가 촉진될 전망이다.

〈2002 영농규모화추진 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2 계획(A)		2001 실적(B)		증 감 (A-B)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7,367	315,866	9,040	268,681	△1,673	47,185
농지매매	2,912	220,983	1,787	132,081	1,125	88,902
임 대 차	4,365	88,610	7,163	131,800	△2,798	△43,190
교환분합	90	6,273	90	4,800	-	1,473

나.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경력이 3년이상이고, 연령이 65세이상(질병·사고 및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60세이상)인 고령농가가 소유농지를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사용대하고 영농에서 은퇴하는 경우 ha당 281만원(지원상한액 5.3ha, 1,500만원까지)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생산성이 낮은 65세이상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2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600ha, 1,686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2001년도 사업비 초과 신청접수 물량 및 2002년도 영농규모화사업 예산 등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금년에는, 완전경영이양을 전제로 하는 농지매매사업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2001년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대상자로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확정된 자는 농지임대차도 지원한다.

2003년부터는 그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경영이양직불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생산성이 낮은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촉진하여 이들의 농지가 쌀 전업농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쌀산업의 구조조정이 보다 실효성있게 할 계획이다.

〈2002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2 계획(A)		2001 실적(B)		증 감(A-B)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600	1,686	1,952	5,480	△1,352	△3,794
농지매매	77	214	245	690	△168	△476
임 대 차	523	1,472	1,707	4,790	△1,184	△3,318

다. 생산자조직 중심의 계열화·브랜드화 추진

WTO체제 출범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규모화 및 계열화를 통한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판매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선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작목반·영농조합을 계열화함으로써 일선조합이 실질적인 산지유통주체가 되도록 하고, 일선조합은 다시 광역의 연합조직에 계열화하여 마케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작목반·영농조합과 같은 기초생산자조직은 생산에 있어서 정보교환 등 생산활동에 치중하고, 수확후 관리, 소비지 출하 등을 일선조합이 수행하도록 하며, 광역의 연합조직은 유통정보, 신상품개발, 브랜드화, 판촉 등 마케팅 활동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생산자조직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 중심의 공동출하 사업이 확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90개소의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지정하여 유통정보의 수집·분산,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등 품목별 지도·지원의 중심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별 연합사업 확대(11개 조직, 23개 품목)를 통해 산지유통혁신과 실질적인 생산출하조절을 담당하는 품목별 연합조직의 결성을 촉진(2002 : 11개 연합조직)함과 아울러, 해당품목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전국단위 연합조직에 자조금 조성을 보조지원(2002 : 23억원)함으로써 생산자조직 자율에 의한 수급조절능력이 배양되도록 할 계획이다.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이 해당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개보수·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2년 종합자금지원은 7,230억원(농특자금 1,480억원, 농협자금 5,750억원)으로 농기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을 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농업종합자금은 기존 농림사업자금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자금을 사전에 배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풀(pool)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수시 신청에 따라 연중 수시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금공급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실적	2000실적	2001실적	2002계획
합 계	15,000	160,500	175,717	723,000
농특자금	15,000	128,500	138,717	148,000
농협자금	-	32,000	37,000	575,000

공급과잉 우려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었던 양돈·양계부문의 신규시설 설치자금에 대해서는 종합자금제 도입 취지등을 감안하여 2002. 5월부터 신규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추세와 어려운 농업경영여건을 고려하여 2002. 7. 1일부터 대출금리를 5%에서 4%로 낮추어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축산경영자금중 전업경영체 지원자금인 농기업경영자금과 축산전업경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자금중 농업종합자금제로의 통합이 바람직한 사업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종합자금제는 정책자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부실화율을 낮추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들도 남아 있다.

앞으로 대출절차를 더욱 표준화하고 대출관련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담당자 확충 및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취약한 사업계획 수립능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있는 경영체를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인력을 육성하고 대출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영실태조사결과의 자료화와 경영분석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 부실화징후의 사전 감지, 농가에 경영진단자료 제공, 컨설팅사업과 연계 등 사업성공위주의 사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업종전망 및 동향분석 자료를 대출심사자와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1)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지난 1981년부터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까지 총 117,794명의 후계농업인을 선정하여 20,116억원의 사업자금을 지

원하였다.

2001년도에는 3,270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60백만원씩 총1,100억원을 개인별 영농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현황〉

구 분	1981~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 인 원 (명)	88,643	8,526	8,789	5,426	4,674	3,270	117,794
○ 지원자금(억원)	11,346	2,271	2,400	1,500	1,500	1,100	20,116

(2) 법인경영체 지원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농작업의 대행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소규모 농가들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 현재 7,653개소(영농조합법인 5,986개소, 농업회사법인 1,667개소)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법인의 난립 및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운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한 경영상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 회생불가능 법인에 대한 퇴출 유도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3) 농업교육의 내실화

새천년 지식기반사회와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01년도에는 2,731백만원을 지원하여 76,384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업인 교육훈련 체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교육수요자인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요자가 다양한 교육방식과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On-Off Line 및 미디어교육방식을 결합한 『입체식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는 수강신청, 공급자는 교육홍보, 정부는 교육관리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기관간 경쟁을 통한 수요자중심 교육전환 유도과 인센티브제 정착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성과평가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관간 중복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에 회계·경영반 등을 개설하여 농업인이 합리적인 경영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4) 농업경영혁신 추진

농업구조개선투자로 경영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경영능력향상이 병행되지 못해 투자효과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농업인의 경영혁신노력을 측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2001년도 현재 60개의 표준진단표를 개발, 보급하였다.

농업인들이 표준진단표 작성을 통해 농업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진단결과를 다른 농가와 비교해 보아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 개선해 나갈수가 있다.

또한, 보다 고급경영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컨설팅지원사업을 1999년 156개, 2000년도에는 379개, 2001년도에는 500개 농가에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국고 1,500백만원을 지원하여 500개 농가에 대해 우수한 민간컨설팅능력을 농가와 적시에 연계시켜 기술, 경영 등 종합컨설팅을 실시하므로써 우리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한 단계 진보시켜 나갈 계획이다.

(5)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2000년에는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의 후속절차로 2001년부터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여 2002.7.1부터 시행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틀을 완성하였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중견여성농업경영인반과 초급여성농업경영인반을 개설하여 2000년에 86명을 교육하였고, 2001년에는 173명을 교육하였으며, 2002년에는 4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1년과정의 여성농업인 교관 훈련을 통해 개발된 여성농업인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후계여성농업인은 2000년에 859명을 선정하였고, 2001년에는 462명을 선정하는데 이어 2002년에는 339명을 선정하여 영농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 방지와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2000년 731명, 2001년에는 1,692명을 이용하는데 이어 2002년에는 농가도우미 3,2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1999년부터 추진해 온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과제는 매년 3과제씩 연구해 왔으며, 2001년에 각종 농업정책에 대한 성 분석 연구, 농업·농촌발전과 여성 전문인력육성 교재 개발(4종) 및 여성농업인 취업유형별 소득전망 등 3과제를 연구하는데 이어 2002년에는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및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방안 등 3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다.

바.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 등에 대한 임업기술·정보의 보급과 교류 및 육성자금의 확대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임업기능인 영립단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조성된 임업기능인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으로 숙련된 전문임업인 양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임업노동력의 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422천ha 중 70%에 해당하는 4,484천ha가 사유림으로서 소유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립가, 임업후계자를 사유림경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은 확대 선발하기 위하여 임업진흥촉진법령 개정(2000. 6. 7)하여 지속적인 선발로 2001년말 기준 독립가 365명, 임업후계자 1,047명이 선발되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육성자금은 2001년도에는 독립가 60억원, 임업후계자 75억원 총 1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용자조건도 장기수 사업의 경우 5년거치 10년상환에서 20년거치 15년상환으로 대폭 연장함과 아울러 기대출분까지 소급적용토록하는 등 지원조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육성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임업용기계에 들어가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립가·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15명) 확대 및 임업선진국 해외연수 기회(12명)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사.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1) 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

지난 1981년부터 농어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을 추진하여 2001년까지 총 12,317명의 어업인후계자를 선정, 2,064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1988년부터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왔으나,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어업인후계자를 1천명씩 지속적으로 선정·육성하여 전업어가·선도어업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581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50백만원씩 총 143억원을 개인별 영어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 하였다.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현황〉

구 분	1981~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 인 원(명)	9,610	927	608	625	547	12,317
○ 자금(억원)	1,349	254	159	159	143	2,064

(2) 전업어가 육성지원

우리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단위 전업어가를 확보할 목적으로 1992년부터 전업어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전업어가가 되고자 신청한 분야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최근 3년이상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영주가 55세이하인 어가를 전업어가 대상으로 선발하여 2004년까지 3,844호를 전업어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2001년까지 1,788호의 전업어가를 선정하여 94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 년에도 151호에 76억원을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어업경영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선도어업경영체 육성 지원

경영규모, 시설장비, 경영능력 등에서 가장 앞서가는 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일반어가와, 수산계학생,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0년까

지 총 42개소를 선정하여 34억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사업예산의 미반영으로 추가 육성은 없고 기존 경영체를 육성 관리할 계획이다.

(4) 영어조합법인 경영체의 육성지원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996년도말 도입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2001말 현재 740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바, 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매년 정기적인 경영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가. 생산기반 정비

(1) 진흥지역 중심으로 우량농지에 대한 경지정리 촉진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필지의 규모화, 용·배수로 정비 및 구조물화, 농로의 정비와 환지를 통한 분산된 개인농지를 집단화하는 사업으로, 영농기계화 노동시간 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어 쌀경쟁력 제고 대책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다.

경지정리사업은 전체 논면적 1,146천ha중 농업진흥지역내 665천ha와 농업진흥지역밖 135천ha를 합쳐 800천ha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추진하여, 2001년 봄까지 전체 논면적의 62%인 709천ha를 완료하였다.

2002년도에는 2001년 가을에 착수한 7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에 3천ha를 착수하여 2003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일반경지정리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 논면적	목 표	2001년까지	2002년 계획	2003년 이후
○ 사 업 량	1,146	800 (915)	709 (813)	7 (8)	84 (94)
- 농 업 진 흥 지 역	770	665 (760)	623 (713)	7 (8)	35 (39)
- 농 업 진 흥 지 역 밖	376	135 (155)	86 (100)	-	49 (55)
사 업 비	-	95,322	65,482	1,877	27,963

※ 마무리 기준, ()는 용배수로, 도로를 포함한 구역면적

(2) 우량농지 200천ha를 대구획경지재정리 추진

대구획경지재정리는 이미 경지정리는 되었으나 필지규모가 소구획으로 대형농기계 영농이 어렵고 농로가 없거나 좁아서 농기계 통행에 불편하며 용배수로는 관배수 기능이 겸용이거나 토공으로 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운 지역을, 필지규모는 3,000평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를 분리구조물화하며 농로를 대형기계 및 농산물 운반에 편리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여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 200천ha를 개발할 목표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1994년부터 시작하였는데, 2001년 봄마무리까지 79천ha를 완료하여 40%를 달성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2001년도 가을에 착수한 4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고 가을에는 4천ha를 착수하여 2003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이 사업은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 사용과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도록 경지정리함으로써 전문영농조직이 대규모로 영농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쌀생산비를 줄이는 등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보다 큰 효과가 있다.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2001년까지	2002년계획	2003년이후
○사업량(천ha)	200	79	4	117
○사업비(억원)	54,214	19,191	1,074	33,949

※ 마무리 기준

(3) 밭작물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밭기반정비 확대 추진

국민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채소, 과일 등 밭작물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경쟁력제고 및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전체 밭 730천ha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로 110천ha(15%)를 정비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2001년까지 10,729억원을 투자하여 개발목표의 43%인 47천ha를 정비하였으며, 2002년에는 1,217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투자하여 5천ha를 정비할 계획이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2001년까지	2002년계획	2003년이후
○ 사업량(천ha)	110	47	5	58
○ 사업비(억원)	25,794	10,729	1,217	13,848

(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

농작업의 기계화가 확산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기계화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유통시설간 농로를 확·포장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주요 간선농로 22천km에 대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까지 11,362억원을 투자하여 목표의 51.1%인 11.2천km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2002년에는 1,514억원을 투입하여 1.45천km를 확·포장할 예정이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계화영농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운반시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농산물 유통개선과 농촌 지역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로 등 일상 생활도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2001년까지	2002년계획	2003년이후
○ 사업량(천km)	22	11.23	1.45	9.32
○ 사업비(억원)	29,262	11,362	1,514	16,386

(5)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중 재해취약시설과 흠수로 7,71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수지를 비롯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2,295개소의 수리시설중 1945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2,090개소이고, 간지선용·배수로의 경우는 46천km중 57%인 26천km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 시설의 현대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98개소, 지방관리방조제 1,491개소 등 전국 1,589개소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945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48%인 759개소에 달할 뿐 아니라 방조제 외측보호 사석의 이탈,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제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에 의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

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사업의 확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1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관리 수리시설 5,147개 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82개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719개 지구에 총 20,06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3,636억원을 투입하여 210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구 분	개보수 대상		2001까지		2002 계획		2003 이후	
		%		%		%		%
	개소							
○ 사업 물 량	11,206	100	948	53.1	210	1.9	7,353	45.0
- 농기공수리시설	7,716	100	5,147	66.7	110	1.4	2,459	31.9
- 국가관리방조제	206	100	82	39.8	9	4.4	115	55.8
- 지방관리방조제	3,284	100	719	21.9	91	2.8	2,474	75.3
	억원							
사업비 계	104,135	100	20,066	19.3	3,636	3.5	80,433	77.2

※ 방조제는 반복 개보수계획 반영

(6) 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은 하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수리시설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재해대책사업이다.

전국의 상습침수 농경지는 235천ha로서 이중 지표배수개선 대상면적은 188천ha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안성천, 삼교천 등의 큰 하천변과 그 지천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지하배수개선 대상면적은 47천ha로서 수령논 등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01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및 저습답 235천ha중 111천ha가 완료되었으며, 2002년도

에는 108개 지구에 2,252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31개지구 8천ha를 완공하여 배수개선율을 50%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표배수개선은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대 상	2001년		2002년		2003년		
		%	까지	%	계획	%	이후	
○ 사 업 량	천ha							
	235	100	111	47.2	8	3.4	116	49.4
- 지표배수	188	100	108	57.4	8	4.3	72	38.3
- 지하배수	47	100	3	6.4	-	-	44	93.6
○ 사 업 비	억원							
	46,000	100	16,017	34.8	2,252	4.9	27,731	60.3

(7)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한해상습농경지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있다.

2001년까지 총논면적 1,146천ha중 881천ha가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는 수리답으로 조성되었으나, 아직도 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4년까지 전체논 목표면적 1,100천ha중 907천ha 82%를 수리답으로 조성하고자 추진중이다.

2002년도에는 3,747억원을 투자하여 63천ha에 대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중 7.5천ha를 완공할 계획에 있고 연차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총논면적	목 표	2001년까지	2002년계획	2003~ 2004년	2005년이후
1,149천ha	1,100	881	7	39	173

(8)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농지조성 등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규모화·집단화된 새로운 간척농지를 창출함과 아울러, 육상운송거리 단축에 의한 교통환경개선·종합관광권 형성 등 지역경제기반 확충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행중인 새만금지구를 비롯한 7개지구, 122천ha를 대상으로 2001년까지 37%(20,205억원)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고, 2002년도에는 42%(국고 1,886억원, 농지관리기금 2,350억원 계 3,236억원)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지 구 별	개발면적 (ha)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 사업비			사업기간
			2001년까지	2002년계획	2003년이후	
계(7지구)	121,560	59,112	21,660	3,236	34,217	
미 호 천 (Ⅱ)	4,430	2,241	1,565	245	431	1989~2005
금 강 (Ⅱ)	43,000	5,847	2,228	381	3,238	1989~2006
홍 보	8,100	3,071	1,729	180	1,162	1991~2005
영산강(Ⅲ-1)	13,160	6,814	2,361	410	4,043	1985~2006
영산강(Ⅲ-2)	7,840	3,515	1,188	140	2,187	1989~2007
새 만 금	28,300	30,489	12,458	1,800	16,231	1991~2011
영 산 강 (Ⅳ)	16,730	7,135	130	80	6,925	2001~2007

(9)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어업생산기반 시설사업은 전국 연안 자연부락 단위인 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항포구에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시설하여 어촌 지역의 교통, 상권, 물류, 관광등의 종합적인 기능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가장 큰 재산인 어선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시설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5,432억원을 투자,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사업에 선착장·물양장 등 어선계류시설을 포함하여 2001년까지 전국 109개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내의 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등에 3,26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30개 권역내에 350억원을 투입하여 어업생산기반 시설사업등을 추진중에 있다.

나. 농업의 기계화

(1)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가) 추진배경

농업기계화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업기계화촉진 시책에 따라 부족한 농업노동력 문제해소,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가소득증대 등 농업구조개선 촉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가격·유통 등 공급문제, 농기계산업구조의 경쟁력 약화, 농기계 사후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 기계화촉진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나타나 21세기 농정여건에 걸맞게 농업기계화정책의 중장기계획의 기본틀을 새로이 하고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2002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여건의 변화와 개방화에 대응,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에 마련한 농업기계화 정책 제도개선 방안의 실천 및 농업인의 편의 및 농기계이용률 증대를 위한 사후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기계화정책 제도개선

업체통보가격을 상한으로 하였던 농기계가격을 완전자유화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다. 농기계 모델의 합리적인 관리와 우수성능 농기계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기계모델에 대한 형식명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구조, 성능·안전성 등이 기존 공급모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형식명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생산중단모델, 소량판매로 경제성이 없는 모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저비용 농기계 보급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진입 모델이나 공급중인 모델 중 기술개발, 국산화 등으로 생산원가를 10%이상 절감한 경제형 농기계 공급제도를 도입하여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우대하기로 하였다. 작물생육, 환경조절기기 등의 신규진입시 시험연구기관의 검증의무를 부여하고 새로 개발된 기종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평가를 거치게 하며, 품질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농기계는 자유진입기종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진입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A/S실태 종합평가를 계속 추진하여 농기계 수리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는 한편, 농기계유통의 효율화 및 중고농기계 거래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2002년도에는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농기계 및 공급자의 기준과 신기술농기계와 발작물·축산전용 농기계에 대한 우대지원 등의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제도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융자지원한도액 산정에 있어서는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고품질벼 생

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쌀전업농과 고품질벼 생산농가(친환경농업육성법상 친환경농산물인증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쌀품질인증을 3,300㎡이상 받은 농업인)가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지원한도액을 기준금액의 70%에서 90% 해당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저렴한 농기계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국산화 등으로 생산원가를 10%이상 절감한 농기계 및 기본성능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10%이상 저렴한 저가의 경제형 농기계에 대하여는 융자한도액을 20%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도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7,360억원(국고융자 1,472, 농협융자 3,680, 자부담 2,208)으로 98.4천대분의 농기계구입자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2001년 지원한 7,189억원보다 171억원(2.4%)이 늘어난 것으로 농기계 적기 공급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가)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2002년에는 240억원의 수리용부품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수리점 등 먼단위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도 고장 농기계 운반용 차량구입비 뿐만아니라 수리·정비용 건축비 등을 지원하며, 사후봉사업소의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리용 부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와 대리점 사이의 전산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A/S실태 종합평가제(연 2회)를 계속 추진하여 사후봉사 실태가 부실한 제조업체와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제외 또는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지원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사후봉사 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B/S(사전서비스)실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연 2회(3~4월,

8~9월) 전국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주관 하에 사후봉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지역순회수리봉사반을 편성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수리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수리기사와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 운전요원 171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계화영농사를 1,000명 양성하는 등 115천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나)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8개소를 설치하고, 사후봉사업소 보관창고 9개소, 일반농가 보관창고 180개소를 설치하되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도 보조지원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보관창고 설치비 70%를 용자 지원하고 있다.

(다) 중고농기계 유통활성화 촉진

중고농기계 거래시장은 중고농기계 적정 판매가격 산정이나 품질보증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등 극히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선 농협으로 하여금 8개소의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전시판매장 설치 및 수리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개소당 사업비 1억원의 50%인 5천만원까지 보조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용연수를 경과한 중고농기계에 대하여도 3년이내의 기간동안 구입자금을 용자지원토록 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기계화연구소 등의 협조를 받아 중고농기계 용자지원 가격기준표를 시달하는 등 중고농기계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4) 농기계 생산지원

2002년도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서 농기계생산비축에 180억원,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생산비축자금은 연리 5%, 용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며, 시설농업기자재지원은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최근 2년간 매출실적, 국산화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출 지원 한다. 금년도 농기계생산비축자금 지원은 22개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농업 기자재자금은 4개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5) 농업용 면세유 공급

2002년도 재정경제부로부터 배정받은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의 공급 한도량은 휘발유 148,200kl, 실내등유 422,500kl, 보일러등유 17,300kl, 경유 1,709,500kl, 중유 106,600kl, 윤활유 6,900kl, LPG 2,300톤 등 총 2,413,300kl 이다. 이에 따른 2002년도 면세액 추정은 728,353백만원에 이르며, 세부적인 면세내역은 부가가치세 10%, 교통세는 리터당 휘발유 588원, 경유 234원이며, 특별소비세는 등유 107원, 중유 6원, LPG 40원이고, 교육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15%이며, 등유는 특별소비세의 15%이다. 주행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11.5%이며, 판매부과금은 등유에 한하여 리터당 23원이다. 금년도 상반기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실적은 983,922kl로서 배정량 대비 40.8%이며 전년대비 -2.9% 수준이다.

(6) 서울국제농업기계 박람회 지원

2002서울국제농업기계 박람회는 2002.11. 8(금)~11.13(수)일까지 6일간 (주)코엑스(본관 1층, 2층, 신관 1층 : 7,400평 규모)에서 개최한다. 동 박람회 기간 동안 16개국 약 3,200여건의 농기자재를 전시하고, 5개의 부대행사(농기계 수출 활성화 세미나, 국제농기계 학술 심포지엄 등)도 개최되며, 약 25만명의 관람객이 참관할 계획이다. 동 박람회 예산은 국고보조 220백만원과 행사수입금 1,241백만원을 포함하여 1,461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공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해외 우수업체 유치와 더불어 수출활성화 세미나 등 부대행사를 거행하므로써 국제적인 농업기계박람회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제인증협회(UFI)로부터의 인증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국제 전시·박람회가 되고자 계획하고 있다.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1)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확대

농가가 생산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종합적으로 일관 처리하는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농촌노동력을 절감하고, 쌀의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낮추며, 고품질의 지역 특산미를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 수확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저장하여 가격안정 및 가격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01년까지 328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한데 이어, 2002년부터는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고품질쌀 생산 계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단위 : 개소, 억원)

	1991년~2001년	2002년	2003년~2004년	계
개 소 수	328 (443)	0 (84)	32 (590)	360 (1,117)
사 업 비	7,363	392	3,802	11,557

*()내서는 건조·저장시설임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여건등의 영향에 따라 풍·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받기반 정비, 관

수시설의 확보, 비가림시설, 공동육묘장 설치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농작업의 생력화와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확대하고, 온실의 표준화 및 시설자재 국산화로 설치단가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며,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삼생산기반의 구축과 인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첨단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양액재배, 자동화기술 등을 농림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고 생력화 기술을 개발하여 파종·수확 등 전작업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축산시설 현대화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게 시설 및 자동화기계 등의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자동화·현대화된 사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사료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전업농가·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섬유질 및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2001년까지 총 9개소(기존 2개소 포함)를 건설·운영중이다. 가축계열화사업을 통해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축산부문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자동화 자금과 병행하여 운영자금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3.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가.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최근 식품소비구조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생활참여도의 확대 및 핵가족화 심화 등으로 편의성을 갖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은 농업후방관련산업으로서 농산물 수요를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01년말까지 2,82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국에 1,089개소의 농산물 가공공장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총 매출액은 5,970억원, 농어촌 유희인력 고용은 약 9,200명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 5인이상 농가공동체, 주류제조면허 추천·명인 지정업체, 일반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2002년도에는 7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 경기침체로 제조업 전체가 위축되고 식품 소비침체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농산물가공업체도 부도 등 일부 경영부실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 영세·한계업체 166개소 퇴출로 전체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시설비 지원에서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농산물가공공장 기술·경영·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TV, 라디오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나. 종자산업의 육성

1997년 이후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과 21세기 주요산업으로 생물산업의 부상 등 종자산업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종자수급의 안정도모와 신품종육성 등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육성대책을 추진중이다.

채소부문의 종자업체는 2001년말 현재 60여 업체이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품종육종기술 수준이 낮고 경영규모 등이 영세한 편이므로 이들 종자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체별로 지정된 전문작물 중심으로 품종육성자금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우량종자개발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1995-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2004
지원금액	11,429	3,628	2,380	2,965	2,776	6,000

무, 배추, 고추 등의 세계적인 품종육종 기술을 활용하고 협소한 국내 종자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 종자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01년도 수출실적은 17,205천불로 95년 대비 133%증가하였다.

새로 개발된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하여 품종육성자의 신품종육성 의욕을 고취하고자 품종보호제도를 1998년부터 시행중이며, 품종보호제도 시행당시 27개 품종보호 대상작물을 2002년 현재 113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2009년까지 모든 식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 가입(2002. 1)하였으며, 앞으로 국내 신품종의 국외보호와 품종육성자에게 외국의 품종 육성 관련 정보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품종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존유전자원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중이다.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요

농림업분야의 기술은 타분야와 달리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의 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들이 농림업과 관련한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점차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세계는 지금 기술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통일을 대비한 기초식량의 자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21세기 농림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농특세를 재원으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첨단기술개발사업 2,678억원,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1,472억원)에 4,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기술개발사업은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타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업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의 향상 또는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과제와 국가정책 목표달성 및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긴요한 중점기술 및 품목별 일관기술 연구를 위한 기획연구과제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은 영농·영림 현장에서 재배, 사양, 생산기반, 기계, 시설, 유통, 가공, 생활, 환경, 정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로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며 농림업의 소득증대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현장애로기술과제와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을 개발하기 위한 농업인 개발과제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연구의 주체가 되어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 과제현황

2001년말 현재 총 2,367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과제가 1,356건, 첨단 기술개발사업과제가 925건,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제가 86건이다.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 중 현장애로 기술과제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658건, 2001년에 60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718건이며, 농업인개발과제 또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515건, 2001년에 123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638건이다.

첨단기술개발사업 중 첨단기술과제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715건, 2001년에 140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855건이며, 기획연구과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57건, 2001년에 13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70건이다.

한편 벤처형 중소기업 개발과제는 1998년에 11건, 1999년에 17건, 2000년에 23건 2001년에 35건이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농림기술개발과제 현황〉

구 분	연 구 과 제			
	선 정	계 속	완 료	기타(협약, 계약, 중단 등)
현장애로기술과제	718	173	515	30
첨단기술과제	855	387	449	19
기획연구과제	70	47	23	-
농업인개발과제	638	200	425	13
벤처형중소기업개발과제	86	63	15	8
계	2,367	870	1,427	70

한편 2001년말까지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1,427개 과제로 이중 340개 과제는 산업체 및 농가에 이전되었고, 546개 과제는 산업체에 이전 추진중에 있으며, 320개 과제는 현장적용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등 산업재산권 785건,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 6,252편으로 이들 과제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기업체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계약을 체결한 우수 기술개발 과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업체 기술이전우수과제 내역〉

연구성과 (제품명)	제 품 설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관 (생산업체)	경 제 적 효 과
건강홍미	홍국균을 이용한 쌀로 고혈압예방, 혈압강화 등 심혈관계질환에 효과적인 쌀	223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주)제네티카	○ 2001년 1월 제품생산 ○ 2001년 현재 1억원 매출 ○ 2001년도 3억원 매출예상 ○ 2002년도 이후 연간 약 20~30억원 매출예상
씻어나온쌀	알칼리 이온수로 씻은 뒤 급속 건조시킨 쌀 (쌀벌레, 곰팡이, 변패없음)	779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주)라이스텍	○ 2000년 12월 제품생산 ○ 2001년 현재 7억원 매출 ○ 2001년도 40억원 매출예상 ○ 2002년도 65억, 2003년 115억원 매출예상
양파음료	양파를 원료로 한 식이섬유, 비타민 등이 강화된 양파음료	80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현대영농조합법인)	○ 1998년부터 제품생산 ○ 2000년도 추가기술이전 ○ 2000년까지 국내매출 32.5억원 수출 20만불 ○ 2001년 이후 100억원 매출 70만불 수출예상
해파칸	헛개나무로부터 간질환치료제 및 숙취해소제개발	298	임업연구원 (주)생명의나무	○ 2003년 의약품 개발 ○ 시장규모 국내1천억, 해외10억불 ○ 국내 숙취해소시장 약600억원
에코바이오	퇴비 부숙촉진 하는 약취저감미생물로 축산분뇨처리	105	축산기술연구소 (주)우진B&G	○ 2001년 5월 생산 ○ 2001년 현재 1.2억원 매출 ○ 2002년 이후 연간 50억원 매출
녹차음료	녹차를 이용하여 음료개발	99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보성녹차)	○ 1998년부터 제품생산 ○ 1998년 국내매출 10억원 ○ 1999년 37억원 ○ 2000년 39억원 매출
JBB-1 (NG5006)	감귤껍질에서 추출한 물질로 심혈관질환,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 예방	43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바이오맥스	○ 2002년 현재 11.5억매출, 850만불 수출 ○ 2003년 이후 115억 매출예상 (1400만불 수출예상)

(3) 2002년도 제도개선 사항

연구원이 연구비 집행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연구비 카드제 도입으로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운영하여 연구사업의 종합관리와 함께 연구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카드사용분에 대한 증빙을 간소화하여 연구관리 행정을 최소화시키며, 연구비집행의 투명성제고, 신용사회 구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였다.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의 기준범위를 확대하여 참여를 유도하도록 개선하였을뿐 아니라 기업부담율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산업체 참여를 높이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제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상대평가에 따른 강제탈락제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우수 및 불량과제에 대한 차등제도(사업참여시 가점부여 및 참여제한)를 마련하였다.

나.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요

수산업을 21세기 종합해양 과학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997년까지는 농림수산분야를 농림부에서 함께 추진하여 왔으나 1998년부터 수산분야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에 이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과 수산기술개발사업으로 대분하며, 수산기술개발사업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과제현황

지금까지 총 250개 과제를 선정하여 175개 과제는 종료되었고, 75개 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며 2001년말까지 연구가 완료된 175개 과제중 17개 과제가 산업체에 기술이전 되었

고, 20개 과제는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84개 과제는 대어업인 기술지도에 활용되고 있고, 58개 과제는 특허출원하는 등 연구성과가 어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 농어업정보화 촉진

1999년 농업·농촌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농촌정보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초기단계 정보화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농업인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식정보화의 급격한 진전은 많은 환경변화를 가져왔다.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정보격차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IT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한편, 농업·농촌분야에서도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2001년도 8월에는 기존의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농촌정보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조기 확충, 정보화교육의 체계화, 출하지원시스템 확대 등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국가 정보화추진전략 「e-korea vision」에 따라 2005년까지 전국 어디서라도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이다. 다만 실제 일반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중통신망 구축은 민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가 경제성이 있는 대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림부에서는 도·농간의 정보통신기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여온 결과, 2000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읍지역에 초고속통신서비스(ADSL)가 단계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모든 읍지역(총 200개)과 875개 면지역(총 1,223개의 71%)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주민 미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속통신서비스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농가를 위하여 2001년 6월 위성 인터넷 사용료를 ADSL 라이트 요금 수준(3만원/월 정액제)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인의 정보이용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농간, 산업간 정보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 농협 등과 공동으로 「농촌PC보내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자체와 민간기업간 자매결연맺기, 출향인사를 통한 PC보급 확대, 농촌정보화 캠페인 전개 등으로 농가PC 보급을 향상시켜 농업·농촌정보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특히 정부기관, 교육기관, 민간업체 등의 중고PC 또는 사용기간이 완료된 불용PC를 기증받아 수리 등으로 성능을 향상시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업인이 영농경영에 필요한 기술·유통·출하정보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 농업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문화 확산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업은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높이고 정보화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5만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추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의 진전이 빨라지고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업인의 정보화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계획을 수정, 교육목표를 2000~2005년까지 40만명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였으며, 이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장년 층을 중심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되 이 중 10만명에 대하여는 영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과 지역 여건상 교육기회가 없는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현장

위주의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전화만 하면 지역농과 대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 주는 '농업정보119서비스'를 전국 22개 농과대학에서 실시하여 농업인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컴퓨터 등 교육 장비를 탑재한 특장차 버스를 이용하여,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지역별로 현지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시·군의 전산교육장이나 지역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하는 시군 단위의 중급교육과정과 전국 22개 농과계 대학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으로 분리하여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수사례발굴·보급, 정보경진대회와 농업인이 쉽게 접근 가능한 인쇄매체(팜플렛, 농업정보 소식지 등)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3)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하에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업인들의 정보활용능력과 활용정도가 경쟁력의 관건이라 보고 정보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실제경영에 도움되도록 관련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판매에 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수급조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산물 출하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에 개발한 농산물출하지원시스템(<http://www.chulha.net>)을 내실 있

게 운영하여 농업인, 상인 등 시장참여자에게 도매시장별 거래가격, 거래물량, 전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하지원정보시스템에서는 부류별 농산물 주요 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서 농산물 출하시 활용하면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장별·법인별·가격대별 출하물량을 분석한 정보와 연차별 재배면적 분석 및 집중출하시기의 가격·거래물량·가격변화 등의 분석정보가 각종 그래프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는 2002년에 주요12품목(배, 감귤, 닭, 계란, 파, 당근, 수박, 토마토, 호박, 참외, 담감, 감자)을 추가하여 2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핵심 요약정보』와 『맞춤정보서비스』 제공 등 편의위주로 기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99년부터 운영중인 인터넷 「농산물 통합쇼핑몰(<http://www.a-peace.com>)」의 참여 쇼핑몰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One-Stop Shopping을 위하여 통합쇼핑몰에서 상품구매와 대금결제가 한번에 가능하도록 통합장바구니기능과 대량직거래, 공동구매 등 다양한 기능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농업인들의 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고 전자상거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농업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1999년에 106농가를 시작으로 2001년까지 806농가에 대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저변확산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등 농업관련종사자 및 국내외의 농업관련 지식·기술·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의 댐을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지식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은 농업에 관한 Portal Site로서의 역할과 농업인 개개인에게 맞춤정보를 제공하여 농업 및 생활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상호 공유가 가능하고, 정보의 홍수속에서 빠른 시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경험에 의한 영농활동에서 지식·정보를 활용한 영농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지식이 또다른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의 생명력이 증가되어 농업·농촌정보화 축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4) 농림지식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농림지식관리시스템(KMS)은 2000년에 구축하여 2001. 3. 3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본 사업의 목표는 농업과 관련된 모든 지식·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1차 사업시 일반 지식, 해외정보, 신지식농업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과정을 통합하였다.

2001년도 확대구축사업(2차)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를 확대하고 외청, 농림부 소속기관, 관련단체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출하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정보·인물정보·농업관련기사 등 폭넓은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e-Learning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업무지원시스템은 국회자료, 해외출장 등 지식을 업무지원시스템에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2002년도 확대구축사업(3차)에서는 농업인에게 농업관련기관, 단체, 학회, 기업 등 다양한 농업관련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지식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위한 농림지식관리시스템 기능 보완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사용자들의 지식관리시스템 활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5) 어업정보화 촉진

새로운 UN해양법협약에 의한 국제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어업의 어로구역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보기술을 이용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양식기술정보 활용과 전국도매시장의 시황정보를 보면서 출하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어업부문에든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어촌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 산업분야에 비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업부문의 정보화 기반을 크게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어선조업 DB구축과 수산물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어로어업에

필요한 어군정보와 출하에 필요한 시황정보 등을 어업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수산물의 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정보통신이 PC통신에서 인터넷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어군정보, 위판 정보, 어업기술정보, 어촌정보등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어업관련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 추진

수산물은 복잡 다기한 유통절차를 거쳐 소비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산물 유통정보 제공기반의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수산물 유통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유통주체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수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종사자와 소비자들이 쉽게 수산물 유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까지 정부예산, 정보화촉진기금 및 유통주체 부담금 등 5,300백만원을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정보’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산지수협 등 73개소에 대한 위판정보 및 조합업무전산화를 하였으며,

11개 수산부류도매시장에 대한 경락정보 DB화, 3개 도매시장에 대한 무선응찰방식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협중앙회에 대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입통계DB를 구축하여 수산물유통정보를 유통종사자, 어업인 및 소비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가. 수출진흥대책

(1) 농산물수출 현황

농산물수출은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대안임과 동시에 WTO체제하에서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받는 지표가 되며, 우리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규격표준화 등 유통시스템개선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농정시책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의 바로 이웃에는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출시장인 일본과 거대 시장으로 등장한 중국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수출증대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내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연도(1997~2001년)의 농산물 수출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0년 3월에 발생한 구제역 발생 영향으로 농산물 수출의 20%를 차지하던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어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화훼, 채소, 과실류 등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수출농업인의 수출마인드 향상과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성과의 가시화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며 중장기적인 수출농업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최근연도의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1997	2001	증감율(%)
(전체 농림축산물)	1,759.2	1579.9	△10.2
○ 가공 농림축산물	1,143.5	1058.9	△7.4
○ 신선 농림축산물	615.7	521.0	△15.4
- 김 치	39.7	68.7	73.0
- 돼 지 고 기	242.3	46.1	△81.0
- 채 소	38.4	121.1	215.4
- 화 훼	5.3	31.8	500

한편, 수출농업의 인프라 구축의 정도를 나타내는 참여농가와 수출업체의 수출국, 수출품목 등도 상당한 성장세와 수출품목 및 수출국의 다양화 등은 수출농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수출인프라의 변화 추이〉

- 수출국 : (1997) 148개국 → (2001) 153개국
- 수출품목(100만불이상) : (1997) 147품목 → (2001) 159품목
- 수출업체수 : (1997) 1,094업체 → (2001) 1,400업체
- 수출참여농가수 : (1997) 15,030농가 → (2001) 17,000농가

(2) 그간의 수출농업 육성시책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농업의 육성시책을 대별하면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 및 공급기반구축』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을 들 수 있다.

국내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첫째, 전문생산단지를 1997년의 28개 단지에서 2002년 8월말현재 102개 단지로 확대 지정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지를 확보하였으며,

둘째, 수출컨설팅도 1998년 이후 2001년까지 223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WTO에서 지원이 허용되는 수출물류비의 지원을 1997년 51억원에서 2002년에는 219억원으로 확대하고, 1997년 1,986억원 수준이던 수출자금융자규모도 2001년에는 4,0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수출관련 경영체의 자금부담을 크게 완화토록 하였다.

넷째, 국내외 수출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5개국 7개 농업무역관(KATIC)과 22개국 66명의 모니터로부터 입수되는 수출관련정보를 인터넷정보망인 KATI 와 FAX 신문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첫째, 박람회 참가 및 특판전 개최를 확대(1998년 12회 → 2001년 21회)하여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바이어의 발굴, 우수선진제품의 벤치마킹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한국산 농산물의 세계브랜드화를 위해 인삼 및 김치캐릭터를 제정하여 주요수출국에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종래의 라디오와 빌보드 위주의 단편적인 홍보에서 현지 TV와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JUSCO등 해외의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지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수출시스템의 구축 노력도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의 수출지원시책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101억원 수준이던 수출지원예산이 2002년에는 315억원으로 3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수출지원 예산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1	2002
계	10,130	16,253	23,579	30,512	31,495
□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4,723	5,962	8,224	9,348	9,563
○ 국제농산물박람회	2,520	3,711	3,796	4,098	4,098
○ 수출활성화 사업	418	363	777	986	1,031
○ 대형유통업체 직거래체제구축	-	33	840	500	700
○ 수출홍보사업	1,186	1,067	1,994	2,648	2,808
○ 해외시장정보사업	599	788	817	1,116	926
□ 농축산물 판매촉진	5,407	10,291	15,355	21,194	21,932
(수 출 자 금 용 자)	(1,986억원)	(2,705억원)	(2,930억원)	(3,588억원)	(4,040억원)

최근의 농산물 수출은 금년 5월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재개가 지연되고, 주력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기침체 지속 및 각국의 수입검역조치강화 등에 따라 수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적극 추진 등에 따른 시장다변화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도 8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9%증가한 993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과일·화훼·김치 등의 신선농산물과 면류와 같은 가공식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8월까지 농산물 수출동향〉

(단위 : 천톤, 백만\$, %)

구 분	1999	2000	2001	2001. 1~8월		2002. 1~8월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합계	1,679.8	1,531.9	1,579.9	885.7	939.0	925.1	993.0	△0.9	5.9
○ 신선농림축산물	791.3	550.0	521.0	126.6	252.6	113.0	220.7	△10.7	△12.6
○ 가공농림축산물	888.5	981.9	1,058.9	806.9	685.1	812.1	772.3	0.6	12.7

(3)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금년도 수산물수출은 최대 수입국인 일본의 경기침체 및 일부어종의 국내생산저조로 어느해보다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어 이를 극복하고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첫째, 수출주력시장인 일본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한·일수산물교역실무자회의를 통하여 일본의 수출입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일 수출용 활넙치 양식장등록의 확대를 통하여 원활한 수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둘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참가 및 대만·홍콩, 싱가포르·호주에 수산물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신규 구매선 발굴과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수출상품포장디자인 개발 및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하였고, 아울러,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 국한된 수산물 물권담보 융자제도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수출주력품목인 굴 수출확대를 위하여 일본 현지 TV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수출수산물의 위생관리 강화, 우리나라 활어운반 특수차량의 일본내 운행을 위한 교섭 등 교역장애 해소를 위한 통상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수입관리대책

(1)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왔던 농축산물을 연차적으로 관세화 개방하면서 국내시장질서의 유지와 국내 농업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63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다.

저울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은 별도 수입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지정기관배정방식, 수입권공매방식, 실수요자배정방식 등으로 관리방식을 구분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가격등락이 심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 17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는 지정기관 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밤, 대추 등 6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권공매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옥수수, 대두 등 40개 품목그룹은 국내 수요자가 과거의 수입실적 등에 따라 수입권을 배정받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실수요자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기관배정방식 운용과정에서 생긴 판매이익금과 수입권공매방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매납입금은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내농업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은 1988~1990년 국내 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후 국내여건 변화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여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저울관세 적용물량을 증량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품목은 사료용 원료인 옥수수, 보조사료, 사료용근채류 등과 국민 식생활 안정을 위한 원료 농산물인 대두, 팥 등 16개 품목이다.

(2) 관련법상의 각종 제도의 활용

(가) 할당관세

사료용곡물, 농업용원자재 등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인하 조치하였으며(2002년 : 옥수수, 사료용근채류, 농약원제 등 22개 품목) 특히, 2002년에는 쌀소비 촉진을 위하여 제분용 밀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제외하였으며, 관련 업계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변성유장, 채종박, 맥아 등은 세율을 인하 하였다.

(나) 조정관세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양허 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2002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찐쌀, 바나나, 메주 등 8개 품목이며, 혼합조미료(50%→45), 견사(16%→14), 표고버섯(70%→60) 등은 축소 적용하였다

(다)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UR 협정상 관세화로 개방된 품목 중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2.8월 말 현재 수입가격이 현저히 낮은 녹두, 팥, 대두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라) 산업피해구제제도(Safeguard)

수입개방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마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건의와 함께 대 중국 협상결과에 따라 2002년말 까지 긴급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3) 농축산물 밀수근절대책 추진

국내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밀반입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조 아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깨, 콩나물콩 등 10여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관세청과 협조하여 기준신고가격을 정하고 이 보다 낮게 신고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

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요원(378명)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산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산 농산물의 휴대품 과다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휴대농산물의 면세 한도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였으며(80kg → 50, 2000.10), 2002. 1월부터 품목별 반입한도량(5kg, 잣 1kg, 쇠고기 10kg, 한약재 3kg)을 엄격적용하여, 인천항의 경우 2002. 8월말 현재 휴대품 반입이 전년동기 대비 33% 감소하였다.

(4) 수산물 수입관리대책

정부에서는 값이 싼 외국산 수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생산어업인 보호 및 중국산 활어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양식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첫째, 활돔, 활농어, 냉동오징어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저가 및 저질 수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돔, 냉동낙지, 새우젓, 활뱀장어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가·종량세(선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수입활어류중 가장 저가로 수입되는 활민어에 대해 40%의 조정관세를 심규로 부과함으로써 양식어업인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입급증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국내 수산업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수산자원의 부존상태에 따라 국내 생산량등과 연계하여 국내생산실적, 수급실적등을 고려하여 일정물량까지는 저율의관세 부과, 일정기준 이상 수입량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관리하는 관세율할당(TRQ)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셋째,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체결로 2001년 7월 1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등록된 가공공장 에서 생산되고, 위생안전을 보증하는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수산물에 한해서 수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금속탐지기 검사 실시 등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질병감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붕어, 잉어 등 양식장에 방류하는 어종에 대하여도 수산동식물 이식증인대상 품목으로 포함시켜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국내에 수입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입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및 불법 위장 수산물 수입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일곱째, 수입수산물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검사제도 강화차원에서 2001. 2부터는 선도보장이 가능한 냉동품, 염장품, 건제품 등은 정밀검사후 통관토록 하고, 활·신선냉장수산물이 부적합된 경우에는 해당국가, 해당품목에 대하여 선통관을 금지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 10부터는 횡감용 수산물에 대하여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6. 친환경농업의 육성

그 동안 증산위주의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발생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정책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업의 환경정화기능을 극대화하고 환경저해요인을 최대한 감축하여 우리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

책』을 수립, 중장기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업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1. 1월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산림환경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Codex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제교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2001. 1. 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2. 5.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선진국 기준의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육성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농업환경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및 농약빈병·폐비닐·폐농기계와 같은 폐영농자재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데, 농사 중 발생하는 오염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우리나라 전체사용량은 1991년 27천톤으로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모든 농약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에 사람을 중독시키고 농작물과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까지 농약사용량의 30% 감축을 목표로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개발·보급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 농약절감형 재배 기술지도, 천적이용 등 병해충종합방제 체제 구축과 함께 미생물농약, 식물성농약 등 저독성농약을 개발·보급 중이다.

(2)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1999년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 한 적정시

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는 잉여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2005년까지 30% 비료사용량 감축을 목표로 작물양분종합관리(INM)실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토양정밀검정에 따른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주문형 배합비료, 축분퇴비 등 환경친화형 비료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비료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 발생량은 우리나라의 축종별 사육두수(2001.12)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규제대상 농가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이 아닌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공동수거·정화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2001년말 기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는 총 61천 농가로 96%인 58천 농가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처리시설중 91%가 순수자원화시설, 5%는 퇴비화 및 정화시설, 4%는 순수정화시설이 구성되어 있다. 가축분뇨는 2010년까지 퇴비 및 액비자원화를 목표로 하여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4)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농기계 보유대수는 2001년말 현재 3,431천대로서 이 중 약 0.6%인 22천대정도가 폐농기계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27%를 수거처리 하였으며,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이다.

이러한 폐농기계를 수거, 해체, 압착할 수 있도록 폐농기계처리장 설치를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지원하여 현재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에서 “폐농기계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폐농기계처리장에서 수거·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폐농기계 수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폐농기계 수거 캠페인을 정례화 하는 한편, 시장·군수가 마련한 장소이외에 폐농기계를 방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2001년 각각 69백만개, 238천여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환경부 산하 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실적이 74~51% 수준에 그쳐 농촌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3월과 11월을 중점 수집기간으로 정하여 일제수집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집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농약빈병의 경우 1997.10월부터는 농협을 통하여서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우리나라 토양은 모암이 산성인데다 화학비료에 과다 의존하여 농작물이 재배됨으로써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하천·호수의 부영양화, 축산분뇨 등 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농업용수의 수질도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토양개량제 시용, 객토사업 및 농업용수 수질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토양개량사업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와 규산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였다.

1999년부터는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 2001부터는 공급물량을 늘려 규산 4년, 석회 5년 1주기로 공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규산, 석회 각각 4년 1주기로 확대 공급하여 토양개량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 객토사업

사질토 등과 같은 생산성이 낮은 토양과 휴·폐광산 인근의 오염농경지를 개량하기 위한 객토사업은 1996년까지는 1년 상환의 단기성 농업 경영자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1997년부터는 3년 상환의 국고융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오염 추이를 평가 분석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전국 저수지 18천 개소에 대한 수질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수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시설과 규모가 비교적 큰 주요 농업용수원에 대하여는 수질측정망을 설치하고 연2회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측정망은 1998년에 200지점, 1999년에 350지점, 2000년에 450지점, 2001·2002년에는 500지점을 선정·운영하는 등 수질측정망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수질조사결과는 환경부, 시·도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저수지 주변 청소, 주민홍보 등을 통한 수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중, 수질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자연정화기법을 이용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4개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이 중 3개지구에 대한 세부설계를 완료하였다. 2001년에는 세부설계지구 중 전남 무안군 감둔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확대하는 한편, 농업용수 수질개선 공법개발 등 연구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1)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2002년부터 사업내용이 유사한 종전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과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소규모지구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중산간지의 중소규모의 가족농들이 고품질농산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면서, 토양과 수질오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토착미생물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등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지당 2억5천만원씩, 총 2,500억원을 투자하여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0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1년까지 1,310억원을 투자하여 524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02년에는 35억원을 투자하여 14개소를 조성 중에 있다.

(나) 대규모지구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지구당 10~20억원씩, 총 30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2001년까지 380억원을 투자하여 28개 지구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20억원을 투자하여 12개소를 조성 중에 있다.

(2)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

벼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과 화학비료 등 오염원을 줄여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고 안전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매년 7억원을 투자하여 16개소의 친환경농업마을을 선

정하고 2001년까지 3년간 계속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6억원을 투자하여 18개 마을을 조성중에 있다.

사업내용은 벼 재배에 있어 친환경농업의 핵심기술인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INM)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통하여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1999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나 2002년도부터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과 명확히 차별화하고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조건을 강화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인 ha당 524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572ha을 대상으로 매년 5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5,731ha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유통시설 확충, 구매자금 지원, 품질인증 확대 등 판매지원대책의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6개소와 전국의 대형 농협슈퍼, 하나로마트 등에 전문판매코너 90개소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코너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수매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20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84억원을 지원하고, 이 밖에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 우수 인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포장개선 사업비로 46억원을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생산·유통 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유통시설의 확충, 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확대, 소비자의 현장체험기회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농어가 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가. 직불제 확충으로 농가소득안정

(1)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가) 도입배경

최근 연속되는 풍작과 MMA 수입량의 증가 등으로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 국민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으로 정부의 추곡수매도 줄어들고 있다.

구조적 공급과잉, 정부수매물량 감소, WTO DDA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 논의 등을 고려할 때 쌀값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

모하기 위하여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위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에서는 2002년 6월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쌀산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산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농특위에서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지금의 과잉공급을 해결하고 수급균형을 도모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쌀값하락 및 쌀농가소득의 감소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농특위의 쌀소위, 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10.22 명목조수입 하락액의 80%를 보전하기로 하는 등 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의결하였다.

(다) 사업시행

농림부는, 2002년산부터 쌀소득보전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일단 정부예산안 중심으로 중심으로 추진하고 국회와 농특위의 변경사항을 시행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2002년도 사업시행지침을 9월30일 마련하였다.

시행지침은 제도가 수확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농업인들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산에 대한 계약체결이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17만 2천농가가 16만 3천ha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1~2ha의 중규모 경영농가중 25.4%, 2~3ha 경영농가중 33.5%가 신청하는 등 중·대규모 농가의 참여율이 높았다.

한편 쌀소득보전직불제 예산은 5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 조

치와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를 규정하는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이 11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논농업직불제 제도개선 추진

(가) 2001년도 사업평가

농업인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833천ha를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지급대상 선정농가를 대상으로 이중·중복신청 여부와 실제 경작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여 부적격자(농지)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논외의 형상과 기능유지 점검과 친환경영농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토양검사와 잔류농약검사실시 등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지급요건 불이행농가(농지)에 대해서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실히 이행한 농가(농지)에 대해서는 11~12월중에 1,910억원(816천ha, 1,023천농가)을 지급하였다.

200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선기관·단체의 노력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제도도입에 따라 논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농업인·소비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WTO체제하에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직접지불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된다. 2001년도에 지원된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1,910억원(ha당 234천원, 농가당 187천원)은 약 2.2%의 수매가 인상효과와 농가소득(2000기준)대비 0.8%의 소득 지지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2002년도 중점 추진개요

논농업직불제가 도입목적에 부합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2년도에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지난해 보다 2배 인상하여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ha당 40만원으로 하여 총 3,929억원(행정비 25억원 포함)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2001년	2002년
○ 지 원 단 가		
- 진 흥 지 역	25만원/ha	50
- 진 흥 지 역 밖	20만원/ha	40
○ 예 산 규 모	2,105억원 (행정비 34포함)	3,929 (25)

지난해 논농업직불제 시행과정에서, 논농업직불제가 일정규모 이상의 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생산포기를 고려하고 있던 한계농지의 논농업지속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서 논농업직불제 도입목적중의 하나인 논외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중 담수의무를 해제하고 논에 비 이외 다른 작목 재배가 가능하도록 재배작목을 자유화하여 채소, 콩, 사료작물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기능유지가 어려운 과수, 관상수, 약용작물 등 영년생 작물은 계속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재배가능작목 : 콩·옥수수, 채소, 화훼, 사료·녹비작물 및 인삼, 잔디 등

또한, 친환경 영농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쌀 증산 유발효과 방지와 함께,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토양검사는 8,250점에서 61,500점으로 잔류농약검사는 798점에서 2,250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마을 공동책임제를 도입하여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영농기장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서 화학비료, 농약사용량 기장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용량을 감축토록 하였다.

또한, 대다수 논농업농가가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이중·중복선정, 실경작, 필지분할 여부 등에 대한 관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이 같은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10월말까지 일선 행정 기관에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전산시스템이 보급되면 부적격자 색출 등이 용이하여 인력과 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대상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앞으로 제도보완 과제

앞으로 신규 도입되는 소득보전직불제 및 생산조정제와 연계하여 논농업직불 지원제도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이들 제도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논농업직불제의 정책목적 을 재정립해 나가는 한편, 영농규모화 촉진과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3) 친환경직불제 대상지역 확대

2002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영농 이행단계에서의 명확한 차별성을 확보하고 더욱 수준높은 친환경농업이 농업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가지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먼저 대상지역을 종전의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예산사정 등을 감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중 일정수준이상 친환경영농을 이행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직불보조금(ha당 524천원)을 지원하도록 하되, 농가당 최소 1천m²이상 농지를 경작(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수경재배 등은 제외)하여야 하고 연간 친환경농산물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또한 환경규제지역내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 저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친환경영농의무 불이행으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사용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사업대상자 중 종전의 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사용중인

농가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인증으로 전환하여야 계속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정부 이외에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2002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대상 선정〉

(단위 : 백만원, ha, 호)

	대상면적	농가수	보조지원액	비 고
계	5,731	7,126	3,003	ha당 524천원
유기·전환유기농산물 인증	677	641	354	
무농약농산물 인증	1,904	2,435	998	
저농약농산물 인증	3,150	4,050	1,651	

〈친환경농업의 이행단계별 실천기준〉

	친환경영농 이행수준	비 고
○ 일반관행 농업	○ 화학비료·농약은 임의사용	○ 과거의 다수확(증산) 위주의 농업
○ 친환경 농업		
-친환경영농실천의무	-화학비료·농약 기준량이내 사용	-일반적인 친환경농업(농농업직불기준)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농약 기준량의 1/2이내	-친환경직불지원기준
-무농약농산물	-화학비료·농약은 기준량의 1/2이내	-친환경농산물인증대상
-전환기유기농산물	-화학비료는 기준량1/3이내농약사용금지	"
-유기농산물	-화학비료·농약 1년이상 사용금지	"
	-화학비료·농약 3년이상 사용금지	"

(4)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행준비

2002년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정책토론회를 농림부, 지자체, 농경연,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충북(2.26)·서울(3. 5)에서 개최하였고, 도상연습을 실시(2002. 4~6)하여 직불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황성군 강림면, 무주군 적상면, 봉화군 재산면 3개면의 2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실시된 대상연습은 경사도 14%이상의 밭과 초지를 대상으로 구역도 및 지번조서를 작성하고 마을대표 및 마을주민의 협조로 마을협약 작성 및 보조금 신청과정까지 실시하였다.

2002년 4월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대상지역인 399개 오지면의 밭경사도 조사 및 대상지 구역도 작성을 12월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하여 구역도를 작성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수치지형도가 미구축된 군사보호구역 등에서는 지자체의 지가전산도면을 활용하고자 건설교통부의 협조를 구하였다.

나.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

(1)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로 농촌활력증대

(가) 농촌활력증진 방안 모색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국민연금시대의 도래 등으로 레저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농촌이 보유한 고유의 생태환경, 전통문화, 자연경관등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한 체험·체류형 농촌관광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관광수요 증대에 대한 농촌의 수용태세는 아직 미흡하여 다양한 농촌의 부존(賦存)자원을 관광자원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농촌에 산재한 빈집, 폐교와 한계농지 등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전원주거시설이나 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에는 농촌의 자체 자본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외부의 자본을 유입시켜 농촌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활력을 되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나)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 방안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대규모 투기성 자금

이 아닌 건전한 도시자본의 유입이라 할 것이다. 도시자본과 도시민이 농촌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농촌주민들과 융화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개발의 이익을 농촌사회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투자유치의 대상으로는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소유, 농촌 빈집·폐교·한계농지 등을 이용한 전원주거 및 관광·복지시설의 유치, 비농업인의 농업법인이나 협동조합에 출자 참여, 민속주·전통식품 등 친농업·농촌형 산업의 활성화, 체험·체류형 관광사업과 농촌형 체육·위락시설의 유치, 노인복지시설, 교육·연수·수련시설의 유치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농촌투자유치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 농촌투자유치센터의 설치·운영

도시자본의 성공적인 농촌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2002. 7.18일 농촌투자유치센터(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농업기반공사내)를 개설하여 농촌투자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소개·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동센터에서는 농촌투자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관련 법령·제도의 지속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도시자본 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대상사업 발굴, 농촌관광 정보제공 및 농촌에 산재한 빈집, 폐교, 한계농지 등 다용도로 활용가능한 유휴자원 정보의 제공 등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농촌투자유치센터가 개설된 이래 11월 현재까지 3만여명이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였고, 540여명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농촌투자유치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시·도 및 시·군의 농촌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농촌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2) 그린투어 등 농어촌관광 활성화

(가) 그린투어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주5일 근무제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종전의 유명명소 순례위주의 대중관광에서 농촌 전원관광형태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촌관광』은 농촌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로 지역사회로서의 기능과 활력이 점차 쇠퇴되고 있는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기존 농촌지역의 잠재관광자원을 체계화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및 개발하여 도시민이 찾아오도록 하는일이 중요하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훌륭한 자연경관이나 특산품이 있거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과의 연계가 가능한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을 마을별 사업계획 발표와 현장실사를 거쳐 18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중에 있으며, 시범마을 지도자 및 도군 담당자들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도별로 주민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및 주민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관광 관련 최신정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한 농촌관광마을안내, 관광농원, 지역축제 등을 망라한 농촌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촌관광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관광을 추진하고있는 마을을 평가, 우수마을을 선정·표창·홍보하기위해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관광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 『농촌관광프로그램개발』, 『농촌관광시설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등급화방안』등 세종류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농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농촌관광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농촌휴양자원개발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농원은 1984년, 휴양단지는 1989년, 민박마을은 199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4년부터 2001년말까지 국고융자 1,664억원을 지원하여 646개소(관광농원 353, 휴양단지 9, 민박마을 275)를 조성하였으며, 2002년에는 9억원을 지원하여 농촌민박마을 9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의 2001년 한해동안 사업성적을 살펴보면, 관광농원 등에 다녀간 내방객이 528만명(관광농원 434만명, 휴양단지 39만명, 민박마을 55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도·농교류의 매개체로서 역할과 인근지역의 농특산물 판매확대 등 농촌의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다) 어촌관광 등 소득원 개발

① 어촌관광 개발

증가하는 도시민의 관광·레저수요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통한 국민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희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과 어업의 소득원 개발, 어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1990~1996년까지 67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안정적인 사업의 유도를 위하여 개소당 30억원씩 2개년사업으로 투자하는 어촌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2001년까지 전남 보성군,新安군 등 2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는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보존·

전시하여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혜택 제공과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 친해양 교육의 산실을 마련코자 2008년까지 9개 지역에 개소당 60억원씩 3개년 사업으로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전남 완도(60억원), 경남 거제(60억원), 강원 삼척(60억원) 등 3개지역을 지원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부산 북구(20억원), 충남 서천군(20억원), 경북 영덕군(20억원), 제주 북제주군(20억원) 등 4개 지역에 건립 추진중에 있어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어업여건의 변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어업활동의 장(場)인 어촌을 어업체험, 양식체험, 갯벌체험, 바다낚시 등 체험 중심의 21세기형 관광어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인문자원, 산업생산과 연계하여 도시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토착문화적, 환경친화적 관광마을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0개 마을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는 경기도 화성시 전곡마을 등 8개소에 40억원(마을당 5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안내소, 진입도로, 주차장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업인 주도로 운영하게 하여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는 활기있는 선진 관광어촌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계획이다.

② 어업의 소득원개발 지원

어업의 소득원개발사업은 그동안 산업화에 따른 바다의 매립, 간척과 연안어장 오염진전 등으로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국제적인 자원의 자국화정책 등 어려운 수산업의 여건으로 어가소득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농가소득 대비 2000년도 82%수준), 어촌경제를 활성화시켜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1994년부터 관광·부업시

설, 복지시설 등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547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유람선, 체험어장, 특산물전시관 등 10여종의 어촌부업·복지시설 158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2001년에는 60억원을 투입하여 63개 사업을 완료하였다.

(3)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확대 도모

농촌지역에 농외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높여주고,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1984년부터 농공단지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12월말까지 총 299개소의 농공단지를 지정하여 이중 295개소의 농공단지의 조성이 완료되었고,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에 3,434개의 업체가 입주 가동중이며, 105천명이 취업(현지인 69천명)하여 연간 11,972억원(2001년기준)의 임금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은 고용증대와 생활활동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외에 단지 조성공사와 공장건설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촉진, 지역연고기업의 투자활성화, 서비스업의 발달 등 간접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 조성실적〉

구 분	합 계	1997년까지	1998년	1999년	2000~2004년
단 지 수(개소)	299	291	3	1	4
연 면 적(천평)	13,436	12,995	294	103	44

(4) 농산물가공·특산품 생산의 활성화

2001년말 현재 농산물가공업체 659개소, 특산단지 681개소가 운영중이며 가공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001년에 7,257억원을 기록하여 IMF직후인 1998년의 5,723억원에 비해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가공산업과 특산품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지원보다는 기존에 운영중인 업체와 단지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내실화하면서 향토성과 지역지명도를 상품화하기 위해 경영지도, 포장디자인 개발,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나갈 예정이다.

다. 농업경영 위험관리 강화

(1)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

(가) 대상품목 확대

2001년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농작물재해보험제도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200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험대상품목을 포도·단감·감귤·복숭아까지 확대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제도개선

2001년 보험가입신청을 마감한 후 지역조합,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보장수준을 최대 85%까지 확대하였고 그 내용을 세분화하여 농가의 선택범위를 확대하였다. 보험대상재해에 호우를 추가하였고 태풍·우박은 주계약으로 동상해·호우는 특약으로 하는 제도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또한 보험요율 적용단위를 시·군단위로 세분화하였고 보험료분납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농가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율을 순보험료는 30%에서 50%로, 운영비는 50%에서 70%로 대폭 확대하였다.

〈제도개선 내용〉

구 분	종 전 (2001년도)	제도개선(2002년도)
대 상 품 목	사과, 배 (2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6개)
대 상 재 해	태풍, 우박, 동상해	태풍·우박(주계약), 동상해·호우(특약)
상 품 종 류	가입수확량의 70%·80%	70%·75%·80%·85%
보험료 납부방식	일시납	2회까지 분할납
가 입 단 위	농가단위	필지단위 허용
요 율 지 역 단 위	시·도별	시·군별
방제시설 보험료 할인	품목별5~8개 시설, 5~15% 할인	품목별 7~10개 시설, 5~20% 할인
정 부 지 원	순보험료 30%, 운영비 50%	순보험료 50%, 운영비 70%

(다) 가입결과

4월말까지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18,652농가가 11,029ha를 보험에 가입하여 시행 첫해인 2001년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2년째 시행중인 사과·배는 지난해보다 가입면적이 46.9%p가 늘어나, 면적기준 가입율이 29%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는 재해보험제도에 대한 농가의 이해가 높아졌고 보장수준 확대 등 제도개선과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율이 대폭 확대되어 가입상의 어려운 점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복숭아·단감·감귤 등도 시행 초년도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축공제 대상품목 확대

가축공제는 자연재해 등 가축피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발생시 재생산 기반을 조속히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농가 공제금의 50%를 축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공제는 1997~1999까지 3개년 동안 「소」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대상축종에 「말, 돼지」, 2002년에는 「닭」을 추가하였다.

〈가축공제 추진 과정〉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대상가축	소	소	소	소,말,돼지	소,말,돼지
사업조합	70개	93	104	전국	전국
가입두수	35천두	34천두	29천두	632천두	2,318천두
지급건수	355건	1,624	1,078	1,767	3,421
지급금액	319백만원	1,219	955	1,694	4,163

2002년에는 가입두수가 6,617천두로, 2001년도 2,318천두에 비해 크게 확대되어 가축공제사업이 축산농가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공제 제도는 각종 사고(수해, 풍해, 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폐사가축에 대해 양축농가에게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부가적으로 폐사가축의 불법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축종별 보상사고 범위중 돼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고에 “설해”, TGE(전염성장염;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PED(돼지유행병설사병; Porcine Epidemic Diarrhea), Rota(로타바이러스설사병, Rota Virus) 3개 질병과 “축산휴지”를 추가하였고, 사고시 보상금액도 “가입금액 한도내 80%”까지에서 공제상품의 성격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내 8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3)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도입

(가) 추진배경

농업경영이 종래 소규모 영농에서 고가의 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

으로 변모한 반면, 자연조건의 제약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경영상 위험요인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농업경영체들은 가격폭락이나 질병 등 외부충격으로 경영위기에 한번 빠지면 기존부채의 연체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중단되어 그대로 파산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농가부채문제로 귀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건실한 농업경영체가 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 외부 충격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내년도부터 농업경영회생지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3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원자금 500억원(연리4%, 3년거치 5년이내 상환조건)을 반영하였다.

(나) 운영방법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 외부 충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규모이상의 농업경영체 중에서 경영평가결과 회생이 가능한 농업경영체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회생가능 여부등을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를 농협중앙회(시군지부 등)에 설치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밀경영평가(재무상태, 경영능력, 기술수준, 자구계획의 실천 가능성 등)를 실시하여 정상경영체, 회생가능경영체, 회생불능경영체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회생가능 농업경영체에게는 경영체 회생자금을 지원하고, 회생불능경영체의 경우에는 이를 인수하고자 하는자에게 인수 자금을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다) 기대효과

농업경영회생 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 외부 충격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농업경영체에게 정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회생가능할 경우 경영회생자금지원으로 경영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회생불능 경영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업시설을 타농업인이 인수할 경우 인수자금을 지원하여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업자원의 방치와 유실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4)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

2002년 7월 1일부터 용자금리가 5%인 농업정책자금(기금사업 포함) 37개 사업에 대해 1%p 인하하였다.

일시에 많은 사업을 대상으로 인하할 경우,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 재정운용계획 등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계농업인력육성, 농산물수출촉진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과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과 같이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것은 농업경영여건이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금에 의존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고,

- 농가교역조건 : (1995) 97.7% → (2000) 80.0% → (2001) 83.5%
- 농가소득/도시근로자소득 : (1990) 97.4% → (1998) 95.1% → (2001) 75.9%

1997년 이후 시중은행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추세를 보여 왔으나, 농업정책금리는 계속 5% 수준에 고정되어 있어 정책금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게 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도 시중금리의 동향, 국가재정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5)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추진

1998년이후 대형산불의 빈번한 발생으로 피해규모가 대형화되어 임업인의 경영 불안의 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임업분야에 산림재해공제 도입을 위해 2001년도에 처음으로 제도도입의 가능성 및 세부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2003년과 2004년도의 추가보완 연구 후 산림재해공제의 시범사업실시 및 단계적 확대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임업분야의 소득안전망으로서 산림재해공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 등을 통하여 정책보험으로서의 산림재해공제의 제도화 가능성 분석 및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산림조합, 학계, 임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산림재해공제도입준비위원회」 구성·운영하였다.

그러나 2003년도 시범사업시행을 위한 도입준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보험성립의 필수요건인 피해율 및 입목표준금액 산정 등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 연구를 통한 보완책 마련과 2004년 이후 가능하다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제 대상을 산불에 의한 입목피해뿐만 아니라 밤, 표고 등 단기임산물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 어가 경영안정대책의 추진

(가) 어가경영안정 지원

우리나라의 수산업 경영여건은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발효와 해양환경의 악화 및 어업자원의 감소, 수산물수입 개방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고비용·저생산성이 심화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연근해 및 원양어업 경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도에 영어자금 1조 2,050억원, 해외자원생산자금 3,310억원 등 1조 5,360억원을 공급하고, 영어자금은 지난해 인하된 금리 5~5.5%로 지원하며, 해외자원 생산자금은 6.5~7.5%로 지원하던 것을 5.5%로 인하하여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영어자금 1조 4,050억원, 해외자원생산자금 3,000억원 등 1조 7,050억원을 공급하고, 7월 1일부터 영어자금 및 해외자원생산자금 등 35개 자문에 대하여 금리 5~5.5%를 4~4.5%로 1%p 인하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0년도에 어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여 고금리 상호금융자금 1,305억원을 6.5%로 저리대체 및 1년간 상환 연장하였고, 어업인들이 이미 사용중인 중장기 시설성 수산정책자금 128억원에 대하여 1년간 상환을 유예하였으며, 연리 6.5%,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으로 2,000억원의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3,433억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부채경감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어업인이 연대보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 534억원을 농신보 신용보증으로 전환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한데 이어, 2001년에도 농어업인의 부채경감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시행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어가부채경감 특별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01~2003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1,722억원에 대하여 5.0%로 2년거치 5년분할 상환토록 하고, 고금리 상호금융자금 3,700원을 저리인 6.5%로 5년간 지원하며, 연리 6.5%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해 주는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2000년에 2,000억원 지원에 이어 2001년도에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IMF이후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연리 5.0%로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으로 274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6,696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어업영위 및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어업인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중장기 정책자금을 분할 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어업인에 대하여는 상환이자액의 20%를 환불해 주어 어업인 경영부담 및 금융부담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2002년 7월 1일부터 각종 수산시설사업 등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5%에서 4%로 인하 하여 어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업인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나) 어업재해 보험제도의 도입 추진

수산업은 경제상황의 변동 및 자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 수산업의 안정적 어업경영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며, 현재 어선원 및 어선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입율 및 정부 보조율도 낮아 보험제도로서의 실질적인 실익이 없으며,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의 한계가 있어,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지장이 많아 정부주도의 안정적인 어업재해 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 추진

연근해 어선원과 어선을 단일법에 의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보험운영으로 어업인 복지 증진 및 어업경영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공제제도를 정책보험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2001년 2월, 「수산재해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선원·어선공제 정책보험화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다. 동 법안에 대하여 2002년도 정기국회중에 상정하여 2003년부터는 정책보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②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추진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2003년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도에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전 양식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시책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시책

1. 쌀 산업

가. 쌀의 수급균형과 적정가격 유지

최근 우리의 쌀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 국내외 가격차 확대에 따른 경쟁력 저하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품종개발과 생산기반 정비의 결과 1980년대 이후에는 쌀을 자급하게 되었고, 특히 1996년 이후에는 6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으며 지난해에는 3,830만석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생산의 증가 외에도 UR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난 1995년 458만석이던 재고는 2000년 679만석으로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적정수준을 훨씬 넘어선 927만석, 올해 10월에는 재고가 1,040만석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재고의 증가는 막대한 관리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 쌀값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해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한 것은 풍년의 영향도 있지만 적정수준을 넘어선 과잉재고와 이에 따른 시장불안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국제쌀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매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온 결과 쌀의 국내외 가격차는 더욱 커짐에 따라 향후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격차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을 해소하며,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증산위주의 정부주도형 양정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새롭고 효율적인 양정으로 대전환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격불안요인 해소를 위한 과잉 재고처분,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균형, 가격하락과 소득감소에 대비한 소득안정장치 도입, 고품질쌀 생산체계 구축, 쌀 소비 촉진과 가공용 수요개발 등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유통구조혁신, 규모화와 경영절감을 통해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쌀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있다.

나. 고품질쌀 생산·유통촉진

그동안 우리 벼농사는 주곡인 쌀의 자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연속풍작과 수입증가로 공급량이 늘어난 반면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에서는 우리 입맛에 맞는 값싼 양질의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2004년 WTO재협상을 앞둔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우리쌀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생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질이 떨어지는 발벼 재배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정부 구매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질소질비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한편, 고품질의 쌀생산을 위해서는 재배기술 못지 않게 수확후관리 또한 중요하므로 앞으로 생육후기 물관리 및 적정건조·저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한 “고품질쌀 계열화 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2~3개 선정하여 품종을 통일하고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300개의 RPC 18만 8,000ha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이 사업을 통해 품질차별화와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장양곡에 대한 표시사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 쌀소비 촉진 전개

최근들어 식생활 패턴이 다양해지고 먹기 편한 인스턴트 식품소비가 늘어나면서 쌀소비량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정부는 도시화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소비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고 있다. 쌀 소비기반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학교급식용, 군·관수용은 신곡으로 공급하여 수요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가공용 쌀 공급가격을 판매원가 수준으로 인하하고, 쌀 가공제품 및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가공용 수요를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밥중심의 식문화를 유지하고, 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촉진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쌀소비 촉진 TV공익광고, 심포지움 연구발표 등 여론주도층을 통한 쌀소비촉진 행사,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행사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라. 민간유통기능 강화

2004년까지 쌀 유통량의 40%수준을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산물상태로 일관처리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총 7,363억원(국고보조 2,322, 국고융자 2,047, 지방비 38, 자부담 2,956)을 투자하여 신규RPC 328개소, 건조·저장시설 443개소를 설치하였다.

2002년도에는 신규RPC 설치를 중단하고 늘어나는 산물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조·저장시설 81개소를 설치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유통주체의 수확기 물량흡수를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확기 농가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품종을 통일하고 질소비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고품질 쌀생산 계열화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RPC에는 3~7억원의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여 RPC를 민간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채소·원예산업

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지역별 생산기술이나 경영능력이 높은 우수농가를 발굴, 자료를 축적하여 일반 농가들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배·시설채소·꽃 등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감귤은 생산자 조직을 통한 생산조정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추·마늘·양파 등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나.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1) 채 소

(가) 노지채소

고랭지채소·고추·마늘 등 품목별로 전국단위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재배면적을 조절함으로써 수급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비가림 시설·관수시설·이식기·종합처리장·공동육묘장 등 주산단지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유통·가공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수급불안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소수급안정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먼저 사전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관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본 농가수를 2000년 5,800호에서 10,000호로 늘리고, 모니터 수도 44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도록 하였으며, 관측내용을 언론매체와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관측정보 분산 방식도 다양화 하고, 농가의 판로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안정사업 자금도 2001년 4,5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여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최저보장가격제도 실시 대상품목도 2000년 10개 품목에서 2001년부터 12개 품목으로 늘리고 가격산정기준도 기존의 경영비에 자가노력비의 일정비율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에서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최저보장가격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나) 시설채소

1990년대 초반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에 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채소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 38백만불에 불과하던 채소류 수출이 2001년 121백만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 지원된 시설원에 경영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시설원에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술·경영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순회 지도로 시설원에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10여종의 온실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유망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수출물류비 및 수출 구매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시설채소류의 생산과잉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01년부터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도 수급안정제도를 도입한후 2002년도에는 토마토, 풋고추까지 확대하는 등 연차적으로 대상품목과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과 수

1994~1999년까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하여 동일 과종 재배면적 20ha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에 관배수 시설, 고성능 방제기,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키낮은 밀식사과원조성등 생산기반시설과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과장 등 산지유통시설 기반 확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그

동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던 원예특작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업경영체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체계를 개선하였다.

고품질 과실 생산 및 과실판매촉진사업 지원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매촉진행사의 확대로 해외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안정적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으로 2001년 신선과실류 수출이 전년보다 17% 증가한 3,214만\$(24.1천톤)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수출협의회를 통한 수출업체 애로해소 등 수출확대 기조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화 회

절화·분화등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출하 등을 자율조절토록 유도하며, 일관 생산·선별·수송·수출이 가능하도록 집단화된 화훼생산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대도시 법정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규격출하품 포장재 지원 등 규격출하를 확대하고 화훼공판장에 유통정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 확대 등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고품질 품종개발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 축 산 업

가. 한우산업

한우번식기반을 확충하고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1) 한우번식기반 유지·강화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 안정 및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여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암소의 조기 도축을 억제하는 등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송아지 3회이상 생산농가에 대해 두당 20~3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제주도 등의 지역에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값싸고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2)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수입쇠고기와의 품질차별화를 위하여 인공수정료지원, 도체정보수집 등 한우 개량자원 확대와 효율적인 개량정보의 수집·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초음파 단층촬영 기술”, “유전자 분석기술”등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한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거세장려금(20만원/두)을 2000년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 고취와 품질고급화에 기여하고 있다.

나. 낙농산업

우유 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요에 맞는 생산감축 유도과 소비촉진 활동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1) 사육여건 및 사양기술 향상 등으로 생산성 증가

사료가격 및 금리인하 등으로 생산비가 1998년 500원/kg에서 2001년 446원/kg으로 10.8% 줄어들었으며, 사양관리 개선과 젖소개량 등을 통해 2001년 두당 산유량이 7,400kg으로 전년에 비해 0.8% 증가하였다.

앞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우유수급안정 추진

그동안에는 집유일원화 확대를 통해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여 왔으나, 2002년 들어서는 우유생산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원유의 생산감축을 위하여 2개월간('02.4~6월) 젖소도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유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낙농자조금을 투입하여 TV 공익광고 확대, 기획프로그램 제작, 우유요리 강습회 실시 등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우유 소비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잉여원유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잉여원유에 대해서는 정상유대의 70% 수준으로 구매하는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치즈 등 국내산 유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3) 우유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체세포 등급을 3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조정하여 2002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원유검사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낙농가의 유질개선 노력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 양돈산업

양돈산업의 구조적인 수급불안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비선후부위 홍보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 청정화 이후 수출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품질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다.

(1)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돼지 사육두수는 2002. 9월 현재 903만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지가격은 지난 5년간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3~9월)와 비수기(10~12월)로 구분되어 가격의 등락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및 콜레라 등 가축질병으로 일부 지역(제주도)을 제외하고는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어, 이로 인한 수출부위의 제고적체가 가격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선호부위의 국내소비 확대 등 균형적인 소비패턴 유도를 위하여 돈가스 프랜차이즈시설지원, 2차 육가공공장시설지원, TV·CF광고, 지하철테마열차운행, 돼지고기 요리축제·시식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소비확대를 위하여 부위별 소비자가격 인하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 돼지고기 수출재개 대책 추진

2000년 구제역 발생이후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중단 되었으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2001. 5월 제주지역과 9월 전국지역에 대하여 구제역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2002. 4월 대일 돼지고기 첫 수출물량을 선적하였으나, 5월 경기 안성·용인지역과 충북 진천 등에서 구제역이 재발하여 돼지고기 수출이 다시 중단되었다. 또한, 2002.10월 인천 강화 및 경기 김포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돼지고기 대일 수출재개 시기는 2003년 하반기로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대일 수출재개에 대비하여 PSE 돈육감소를 위한 기술교육과 구제역 사후관리 등 수출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필리핀·러시아·몽고등과의 위생조건 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 양계산업

2002. 9월 가축통계를 기준으로 양계 3만수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1천2백호로 전체사

육농가 19만2천호 대비 0.6% 수준이나 사육두수 점유율은 63%로 다른 축종에 비하여 기업화·규모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1) 닭고기 수출입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강화

2001년도 닭고기 소비량은 35만톤으로 이중 수입량이 8만5천톤으로 자급율은 76%수준이었으며, 1997. 7. 1일에 냉동닭고기의 경우 관세 30.5%로 수입개방된 이후 매년 관세 감축과 함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냉동닭고기의 수입관세가 23%로 9만톤수준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닭고기는 2001년도에 산란노계육, 삼계탕 등을 일본·홍콩·대만·중국으로 1,618톤 수출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1,246톤을 수출하였다. 일본지역의 닭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우수 바이어 초청 및 홍보사업, 시장조사사업을 2002.10~12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2) 양계산업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생산자단체, 소비자, 농가, 학계등으로 구성된 민간자율의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과잉사육수수 감축을 위하여 2002. 9. 4~10.12까지 육용종계 도태사업 실시하였으며, 2.5kg이상의 대형닭 생산 유도를 위하여 축산기술연구소의 농가보급 시험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닭 생산농가·계열농가에 대한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양계농가에 대한 사양관리, 경영개선 등 컨설팅지도 업무를 농협 컨설팅지원실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추진할 계란 등급제 시행을 위한 계란집하업을 신설하고 가축질병관리 강화를 위하여 종계업·부화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축산법을 개정하였다.

마.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1)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영활성화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낙후된 축산물 유통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육류유통체계

로 발전시키고자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였다.

2001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9개소(기존 2개소 포함)를 완공하여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일괄 처리하여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고품질 육류를 공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LPC 1개소당 처리능력은 1일 소 50~100두, 돼지 750~2,000두 규모로써 200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육류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위생적인 생산·공급을 확대하여 냉장·부분육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2) 식육판매점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소매유통구조 개선

LPC, 브랜드업체, 생산자 단체와 연계한 직판장 및 가맹점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식육점을 위한 시설지원을 확대하는 등 식육점을 정예화·현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고, 도매에서 소매까지의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거래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3) 가격차별화 유도 및 물류표준화 기반 구축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냉장부분육 유통활성화를 위한 도매유통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선호부위와 비선호 부위의 수급안정과 가격차별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1.12. 1부터는 쇠고기 등급별·부위별 구분판매지역을 대도시 위주의 19개 지역에서 81개 지역거점으로 확대하여 지방에서도 고급육에 대한 가격차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도록 도매시장 지육경락가격에 제비용과 적정

마진을 고려한 소비자권장가격을 산정 공개하고 있으며, 유전자를 이용한 육류감별법을 조기 개발하여 적용하고, 축산물 명예감시원제도 등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4) 2003년도부터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

1999년 9월 7일에 개정된 축산법시행규칙(농림부령 제1345호)에 2001. 1부터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2001년 소 및 쇠고기 수입의 완전자유화 등 양축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징수시기를 그동안 유예하여 왔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징수코자 하며 징수금액은 초년도인 2003년도에는 축산물등급판정 소요비용의 50%는 정부에서 보조하고 50%(60억원)는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를 통하여 충당하고자, 축산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등급판정수수료를 2002년말까지 고시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돼지 등 축산물이 외국산과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등급판정의무제를 자율제로 전환할 예정(2010년까지)이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계란등급제와 시범사업 준비중인 닭고기등급제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등급판정을 원하는 업체에 한하여 자율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국내 부존사료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4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조사료 급여비율을 2004년까지 60%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1)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신규 초지조성이 어려우므로 기성초지를 보완하거나 답리작, 사료포 등 사료작물재배에 중점지원하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운동”과 연계하여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용수원 개발, 목로개설 등 조사료 생산성 증진을 위한 기반을 개선하였다.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 공급을 확대하고 벚짚 수거용 기계보급과 벚짚의 암모니아 처리이용으로 사료의 영양가치를 증진시켜 벚짚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조사료 생산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농가 교육·홍보 및 리후렛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조사료 생산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부존사료자원의 활용 확대 등

축산농가가 농산 부산물 및 곡물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가배합사료시설(분쇄기 및 배합기) 구입비를 2001년 65농가에 45억원, 2002년 38농가에 1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혼합하는 섬유질사료제조시설에도 2001년 6개소 31억원, 2002년 6개소에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부존사료자원의 이용 증대를 도모하였다.

사.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농업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농가 및 단체에 가축분뇨의 액비화·퇴비화 등 자원화시설과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1년에는 1,600개소에 362억원을 지원하였다.

(2) 축산분뇨처리 표준설계도 제작 보급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종류가 다양해 농가의 선택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자 1998년까지 축종별·규모별로 가축분뇨 적정처리모델 30개를 설정하였으며, 1999년에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8종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축산분뇨시설의 건설한 시공과 더불어 축산 농가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촉

진해 나가고 있다. 2002년에는 표준설계도를 CD(2,500set)로 제작하여 지자체·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보급하여 활용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3)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확대지원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를 경종농가가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자원 재활용적인 양축·영농이 이루어지도록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분퇴비의 수요확대를 위해서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축산분뇨자원화를 위하여 경종농가의 액비저장조 설치를 대폭 확대(2002 : 400기 → 2003 : 680기)하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축분비료유통센터(40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4)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처리경비 및 기술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량 기준 설정, 작물별·계절별로 축분퇴비·액비의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체계의 강화

(1) 축산물 위생수준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구축

식육중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대상을 확대(잔류물질 : 2000년 45종 → 2001년 73종)하여 위생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작업장 위생관리기준 (SSOP)의 도입·적용으로 축산물 생산·유통시 생산자중심의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도축·가공·유통 단계에 일관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본격 시행하여 도축장·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으며, “위해축산물의 회수절

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유통중인 위해축산물에 대해 회수제도(Recall system)를 도입하여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

2001년에 이어 2002년도에도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계절적으로 유입 위험이 높은 2.1일~4.30일까지를 『구제역방역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였다. 4.16일과 4.30일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는 한편,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확대·운영하는 등 국내방역을 강화하였다.

경기도 안성에서 5. 2일 최초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있는 후 안성·용인·평택 및 충청도 진천 등 인접한 4개 시·군에서 16건(5. 2~6.23)의 구제역 발생이 있었다. 발생 신고를 접수한 직후 정부는 관계부처, 군·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차단방역을 실시, 최근 구제역이 발생하였던 외국과 비교할 때 단기간(최초 발생후 52일)내에 박멸에 성공(8.14 종식선언)할 수 있었다.

〈지역별 이동제한 해제 상황〉

구 분		경기 안성·용인	경기 평택	충북 진천
발 생		5.2~6.23(13건)	6.2(1건)	5.3, 12(2건)
살 처 분 종 료		6.24	6.3	5.15
혈 청 검 사		7.16~8.3	6.25~7.20	6.6~6.14
이동제한 해제 (시·도지사)	경계지역	7.28	7.12	6.15
	위험지역	8.7	7.20	6.24

금번 구제역 발생은 총16건중 13건이 최초 발생농장인 안성 울곡농장 반경 10km내의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차단방역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2000년과 달리 돼지에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500m이내 우제류 가축과, 3km이내 돼지 전두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총 162농가 160,155두) 등 강력한 살처분 조치를 시행하였다.

아직 최종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유전자 배열 등 역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금년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외국인 노동자나 해외여행 농가 등을 통해 외국에서 유입되었고 국내에서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 기계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교훈을 토대로 질병 유입경로 및 전파위험도별로 평시방역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한 조치로는 공·항만 검색, 소독 강화 등 국경검역 강화조치의 지속 유지, 시·군단위의 자체 방역대책 수립·시행, 「전국일제소독의 날」 매주 실시, 공동방제단 운영내실화 등 민간 방역 활성화를 위한 국내방역 체계개선 등이다. 아울러 농가자율방역 책임 명문화 및 농장질병관리등급제 도입, 신고지연농가 사육장시설 폐쇄 및 생계비 지원 근거 명시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및 수매보상과 관련한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산 농가 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축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광우병 예방, 닭뉴캐슬병·돼지오제스키병 등 근절기반 구축,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등 다른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쟁력있고 안정적인 축산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자율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 따라 방역대책 추진시 민간 중심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적극 활용하고, 예방접종 및 축사소독 등 자율방역 활동을 위한 방역차량, 예방약 및 소독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의 자율방역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방역

관리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농장폐쇄 및 사육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학·연 공동의 가축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병성감정 제도 등을 확립하여 방역기관간 공동방역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며,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 검역조치를 강화하고 질병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4. 임 업

가.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

(1) 산림용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2000년도까지는 묘목생산에 필요한 자금 용자의 범위가 지정묘목 생산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간이온실 시설,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등 양묘장 시설비와 경운기·트랙터 등 장비 구입비에도 확대하여 우량묘목 생산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EU 및 OECD 회원 국가의 경우 「산림용 종자는 반드시 원산지가 증명된 것만 사용토록 하고, 종자 검사를 거쳐 조림용으로 사용하되 이동경로를 명확하게 하는 등 「국제규범」에 맞는 종자 및 묘목의 원산지 증명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을 위한 조립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을 조성하며, 「세계 산의 해」와 「월드컵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경제림 13천ha 및 생활권 주변에 3천ha 등 다양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봄철에 지역별로 기념동산, 테마거리, 생태공원 등 특색있는 향토 경관 숲 41개소를 조성하고 4,255천본을 식재하였다.

「세계 산의 해」와 「월드컵 개최」를 기념하여 2002. 3. 2일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나무심기에 착수함으로써 금년도 나무심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전국적으로 나무심기에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세계 산의 해와 연계하여 제57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대통령 내외분과 시·도 대표, 임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 4. 5일 국립수목원(경기, 광릉)에서 개최하였으며, 기념사를 통해 산림정책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과 나무심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경제림 조성·관리

우리 산림의 70%는 30년생 미만인 청년기 산림으로 지금이야말로 가꾸어 주어야 할 시기이며, 이제부터는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2030년까지 불량임지에 대한 수종갱신 등을 통하여 인공 식재림 240만ha를 조성하는 한편 우량활엽수림, 소나무, 참나무 등 천연림 110만ha에 대한 숲 가꾸기를 실시하여 전체 산림의 55% 수준인 350만ha의 경제림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0개 대단위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경제림 육성권역을 설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권역별 경영목적에 따라 조림에서부터 생산, 가공까지 체계화하는 한편, 백두대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리 고유의 향토수종으로서 목재 가치가 우수한 소나무·참나무 육성권역을 설정하고 숲가꾸기사업, 산림경영 기반시설 등을 집중 투자하여 우리나라 대표 수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4)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증진

2030년까지 350만ha의 경제림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숲가꾸기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 기간(1998~2007)동안 280만ha의 산림을 가꾸어 줄 계획으로 있다.

2002년에는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임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의 환경·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원 함양림 조성, 도시 숲·도로변 경관림 조성, 병해충 피해지에 대한 임업적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시범림 조성사업 등

을 추진하고, 숲가꾸기 1일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나. 자연친화적 산지관리체계 확립

(1) 산지관리법 제정

2000. 9. 29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산지의 보전 및 이용 관련규제 개선대책」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분별한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앞으로 산지전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산지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전용 허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보전임지는 전용허가 또는 전용협의, 준보전임지는 형질변경허가 또는 신고 등 임지별로 인·허가체계를 달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알기 쉽고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자 한다.

둘째, 특히 보전이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요 산맥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유적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우려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보전해야할 중요한 산지는 반드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장애여부,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 저해여부 검토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사전에 생태계보전, 경관보호, 재해위험도 등에 관한 산지전용 타당성 심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개발방지, 자연친화적 개발 유도 및 경관 보전 등 난개발 방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넷째, 「채석허가제도」를 개선하여 국토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채석허가의 남발방지와 강화를 위해 현행 시장·군수의 허가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채석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허가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영세·부실업체의 채석중단 및 채석장 방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또한 채광을 병자한 채석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광구안에서의 채석허가 대상을 현행 규석·장석에서 모든 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산지의 「재해방지명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고 목적사업 도중에 장기간의 사업중단이나 훼손지 방치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산사태 위험 등 피해 우려지는 시설물설치·조립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지관리법안은 2001년도부터 추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었으므로 공포되면 2003년도 상반기에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03년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 채광·채석지 관리 강화 및 자연친화적 복구 추진

산림형질변경허가기준 및 채석허가기준 마련하여 경사도가 45도 이상, 시·군 평균 입목 축적의 150%이상지역은 허가를 제한하고 채광·채석의 경우 면적 하한선을 도입(3ha)하였고 채석타당성 평가를 받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채광·채석지와 일반형질변경지를 구분하여 복구설계서를 승인받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채광·채석지중 국토경관보전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중간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지도하여 2002년말까지 155건 307ha를 복구할 계획이다.

(3)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용도와 도서지역은 자연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그 보존가치가 크고, 국토의 난개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유림에 대하여는 가급적 대부를 억제하고 군청·읍·면소재지가 없는 도서지역내의 국유림은 요존국유림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대부지는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실한 대부지는 과감히 정리 추진하고 있다.

다.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강화

(1)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 체제 구축

2002년은 자치단체장 선거, 월드컵대회등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사회기강 이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불감시 및 진화를 위한 인력동원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특히 2001년 겨울가뭄이 계속되는 등 건조주의보 발령일수가 5년평균 59일에 비하여 2002년에는 98일이나 되어 66%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건조주의보 일수대비 산불발생은 5년평균 7.3건에서 2002년은 5.3건으로 27%줄었고 건당 피해 면적은 5년평균 13.8ha에서 2002년도는 6.8ha로서 50%이상 줄었다.

〈2002년도 봄철(1.1~5.15) 산불상황〉

구 분	5년 평균(A)	2001년(B)	2002년(C)	증감(C/A)
건조주의보(일)	59	56	98	175%
산 불 발 생(건)	433	623	516	119%
건조일수당산불	7.3	11.1	5.3	73%
피 해 면 적(ha)	5,985	836	3,513	59%
건당피해면적(ha)	13.6	1.3	6.8	50%
건 당 진 화 시 간	2:40	1:46	1:50	69%

2002년도 상반기의 주요 산불은 청양·예산 산불을 들수 있다. 무속인과 성묘객이 유품을 태우다가 발생한 청양산불은 헬기 이륙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풍 및 풍향과 일치하는 연료배열 등으로 시간당 산불의 확산속도가 4.4km나 되었다. 청양산불을 계기로 전국 어디에서나 대형산불 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2001년말 현재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총 337천ha로서, 2000년말 발생면적 340천ha보다는 약 3천ha가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전체 산림면적 6,416천ha의 약 5%에 해당되는 산림이 각종 산림병해충에 시달리고 있어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솔잎혹파리는 피해도 “중”이상 지역과 주요지역은 나무주사 등을 실행하여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도 “경”지역은 항공엽면시비 등을 실행하여 피해회복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솔껍질각지벌레, 소나무재선충, 흰불나방 등 기타해충은 발생 전면적 방제원칙으로 피해확산을 저지해 나가고 있다.

(3)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치산녹화가 성공하게 된 이면에는 사방사업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1945년 해방이후 2001년까지의 사방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다.

〈사방사업 실적(1945~2001)〉

산지사방	예방사방	해안사방	해안침식지복구	야계사방	사방댐
727,058ha	388ha	3,748ha	15km	4,158km	1,013개소

최근에는 엘니뇨(el-nino) 현상으로 인하여 게릴라성 집중호우도 빈발하고 있어 산사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금년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야계사방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방지종합대책”(1999.12.28 국무회의 의

결)에도 사방댐을 연간 200개소, 야계사방을 60km씩 시공하도록 반영된 바 있다. 그밖에 산지사방·예방사방·해안침식지복구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2년 사방사업계획〉

산지사방	예방사방	해안침식지복구	야계사방	사 방 댐
60ha	16ha	6km	69km	110개소

(4)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우리 나라는 고등식물이 5,285종, 하등식물 3,609종으로 전체 식물자원은 8,894종이며, 고등식물 5,285종 중에서 목본·초본 등 관속식물이 4,594종, 선대류 등이 691종이며, 규조류, 편모조류, 담수녹조류, 운조류, 해조류 등으로 구성된 하등식물이 3,609종이다

이러한 산림내 식물 등을 보전하기 위해 2001. 3.25일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수목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5년마다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전 및 전시와 홍보를 위해 전국 국·공립 수목원내에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산림박물관은 2001년도말 현재 광릉산림박물관과 공주산림박물관이 개관하여 운용 중에 있고 강원, 전북, 경북, 경남도에 각각 1개소씩 건립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국·공립 수목원별로 1개소씩 총 11개소를 건립하여 수목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생물자원에 대한 탐색·수집·이용 및 산업화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나라의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국가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라. 산림사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 강구

(1)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조림·육림·임목생산 등 산림 작업을 기계화하고 원목 등 각종 임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지역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도밀도가 높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임도는 1968년 국유림내 입목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최초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도까지 총 사업비 748,866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2001년도말 현재 임도 총 시설거리는 15,063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ha당 임도밀도는 2.35m에 불과하여 선진 입업국인 일본 5m/ha, 미국 10m/ha, 독일 40m/ha에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임도시설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km)

구 분	1968 ~ 1995	1996 ~ 2000	2001	누 계
계	9,136	5,657	270	15,063
국 유 임 도	2,971	919	26	3,966
민 유 임 도	6,115	4,738	244	11,097
누 계	9,136	14,793	15,063	15,063
밀도(m/ha)	1.40	2.30	2.35	2.35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보다는 “물량”확대에 치중하여 왔으나, 그 결과 여름철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되어 경관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물량” 위주에서 벗어나 “품질” 우선으로 전환하여 경관이 유지되고 견실한 임도를 구축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부실임도는 대대적인 구조개량사업을 전개하여 미비사항을 보강함으로써 경관 저해 및 피해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유임도는 신설사업비의 70%를, 민유임도는 신설사업비의 50%를 구조개량사업비로 전환하여 보강이 시급한 임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량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유 임도는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하여 시설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임도 노선의 선정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법령을 개정하여 “임도 노선 선정기준(1999.11.22)” 및 “임도의 타당성 평가제도(2001. 1.26)”를 도입함으로써 법제화하였다. 또한, 견고한 임도시설을 위하여 설계·시공 등에 필요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양성 배치토록 하고,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개정하였다.

(2) 임업기계화 촉진

임업기계화는 가격이 비싸거나 수요가 적은 기종은 굴삭기 등 타용도 기계의 부차용으로 개발하고 기계톱, 예불기 등 수요가 많고 저렴한 장비는 자체 개발 또는 기존 보급 장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적용 가능한 타워야더 등 외국의 고성능 임업기계를 선별하여 시범 사업용으로 도입한 후 적용시험을 거쳐 실용성 있는 기종은 벤치마킹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독립가, 협업체 등에 기계장비를 보급하고, 산림경영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대여·수리할 수 있는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운영하여 2007년까지 전국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3)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능인영양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1995년에 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450개단 5,344명을 조직(국유림 106단 1,406명, 민유림 344단 3,938명)하였으며 장기적으로 2007년까지

850개단 10,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1997년에는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기능인에 대한 육성과 장비지원, 취업촉진방안 등을 제도화하고 2000년에는 기능인 자격기준, 교육기간, 훈련기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능인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향후 산림사업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03년이후 계속 확대 육성할 계획이며, 연중 작업물량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산재보험등 직업정착을 위한 생계보장 및 후생복지 대책을 강구하여 임업기능인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4)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단기임산물 생산액은 1조 5,467억원으로서, 임산물 총생산액 3조 659억원의 50%에 달하는 바 임업의 장기성(40~60년)을 보완하고 산주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자원화와 산림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기소득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임산자원의 소득화 촉진과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소득 품목인 밤·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고 매년 83백만\$ 정도를 수출하는 밤의 경우는 우수품종 개발 보급, 노령목 갱신, 병해충 방제 및 방제장비 지원, 작업로 개설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 생산자 협업체 육성, 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 조경수, 분재, 자생란 등 산림관상자원과 산약초·약용수종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로 우리 토종식물자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확대와 식물자원 수요·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지원 등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 살기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1) 산촌을 살기좋은 정주공간으로 확대 육성

국토면적의 46%, 산림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산촌은 농림업의 생산기반이며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핵심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촌은 그동안 국토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되었으며,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이농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인구 과소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1995년부터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현재까지 47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61개 마을을 조성중에 있으며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끝나는 2007년까지 총 24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2) 휴양공간 확충·서비스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1980년대에 들어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산업화의 심화 등으로 급증하는 야외 휴양수요를 산림으로 흡수하기 위해 1989년부터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1991년에 815천명에 불과하던 전국 휴양림 이용자 수가 최근 2001년도에는 3,818천명으로 무려 4.7배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5일 근무제 등이 시행될 경우 산림휴양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청에서는 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2년도 현재 운영중인 92개소와 조성중인 15개소를 포함하여 2007년까지 157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휴양공간을 체험·교육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자연학습 및 산림체험코스 시설의 설치를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산림휴양서비스를 내실화해 산림휴양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노력하고 있다.

(3)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산림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도에 휴양문화계를 산림문화과로 확대 개편하여 휴양·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림휴양공간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닌 산림교육과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한다.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진흥을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녹색학교 운영(10천명/년), 푸른 숲 선도원 선발육성(50천명/년)하고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개최, 초·중등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그린캠프 개최,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산림환경 연수를 실시(150명/년)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 숲 해설가를 배치(100명/년)하여 숲과 산림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과 나무, 자연을 주제로 한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등을 개최하였고 이 밖에도 생명의 숲을 위한 시와 음악의 밤, 숲 속 음악회 및 시낭송회, 산악스키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림문화 진흥과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악마라톤, 산악스키 등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에게는 호연지기를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송이축제, 뗏목축제, 소나무축제, 통나무축제 등 유무형의 산림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산림문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4)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2001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 연간 1회 이상 등산을 한다는

사람이 75%나 되고, 연간 10회 이상 산에 간다는 사람도 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산로는 좁은 국토에서 보다 효율적인 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므로 쾌적한 등산환경의 조성과 등산로 훼손방지와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전국의 등산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등산로를 복구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관리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등산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를 국가 탐방로로 지정하여 전국 등산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등산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정표, 안내판, 나무표찰, 해설판 등의 표준화 등 등산로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바.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1) 해외조림 확대

목재의 장기·안정적 공급 및 국내 목재수요의 50%까지 충당할 계획으로 해외조림을 2050년까지 100만ha를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해외조림에 착수하여 2001년까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72천ha를 조림하여 장기 목재공급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목재다수요업체에 해외조림확대를 위하여 융자금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2001: 62억원 → 2002: 122억원)하고, 조림사업비외에 육림비를 지원하며, 융자비율도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2) 산림자원보유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목재수급안정은 국가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내 목재자원이 성숙되지 않아 목재수요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주요 산림자원 보유국인 호주, 인니 등 7개 국가와 양자간 임업협력약정을 체결하여 목재수급 안정과 해외진출업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2.10.11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서 개최된 제2차 한·베트남 임업협력위원회에서는 해외조림임지 제공, 임산물 가공산업 투자촉진, 임업기술정보교류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2002.10.14 미얀마 임업부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얀마 임업협력위원회에서는 해외조림 투자정보, 목재진출업체의 기업활동, KOICA에서 실시한 산림녹화사업 평가와 임업공무원 훈련연수 발전방향에 관해 집중 논의 하였다.

한편 2002년 12월 대전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인 제4차 한·중국 임업협력위원회와 제2차 한·몽골 임업협력위원회에서는 최근 동북아 산림환경 문제로 떠오른 사막화방지에 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조림기술 전수, 임업공무원 연수, 병해충방제 기술 등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5. 수 산 업

가. 연근해어업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연근해어업은 최근들어 어업자원의 감소, 주변국가의 EEZ선포, 해양오염 심화 등 주변의 어업환경 변화와 IMF의 영향으로 인한 어업경비의 증가로 대부분 어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업환경변화에 맞도록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보완 발전시키는 등 개혁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사업을 국정 100대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안어업은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역실정과 어업자원 수준에 맞게 허가 정수 조정 등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근해어업은 EEZ확정시 영향이 크거나 어업경쟁력이 저하된 대형선망, 대형트롤, 대형기저(외끌이·쌍끌이),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채낚기, 근해 안강망, 근해유자망

등 8개 업종을 위주로 우선 감척해 나가고 또한 경쟁력이 열위인 업종에 대하여도 감척 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이와 별도로 유사업종 통폐합 등 어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자율관리 어업정착 등 어업자원관리를 강화하여 연근해 어업자원을 보전하여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99.9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영향받는 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동 협정과 관련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하여 1999~2001년까지 총 1,197척을 감척하였으며, 한·일, 한·중 어업협정 관련 영향이 없는 어선은 “일반감척사업”으로 1994~2001년까지 근해안강망 등 901척을 감척하였다.

2002년도에는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한·중어업협정 관련, 145척과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한 19척 등 총 164척의 근해어선에 대하여 감척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일반감척 사업으로 연안어선 51척과 근해어선 74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2) 주변수역 자원보호 및 관리강화

UN해양법 발효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의 EEZ선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EEZ수역에서 어업자원을 능동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제정, 1997.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수역의 어업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자원전문가 협의회 구성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2001년까지 4,963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157천ha를 시설하였고, 2002년에도 536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10천ha를 시설중에 있으며,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2001년까지 70여종의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19개 국·도립 배양장에서 연간 7억마리를 생산하여 분양 및 방류하고 있으며,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2001년까지 338백만마리를 방류하였다. 2002년도에도 국·도립 배양장에서 6천만마리와 정부에서 7천 6백만마리를 연안바다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2001년도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월, 9월 장관담화문 발표, 어업인 자율결의대회 개최 등 어업인에 대한 의식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5월, 10월 어패류 산란기 및 성육기에 법무부, 해양경찰청, 시·도 등 유관기관과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어업자 3,219건을 적발 단속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노력하였다.

2002년도에도 어업질서의 조기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감과 아울러 생계형 불법어업자에 대해 어업질서 확립자금(2002년도 예산 30억원)을 지원하여 합법어업으로의 전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 어로시설의 현대화

2001년에는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영세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소형 노후어선, 기관대체 및 어선장비·설비개량 등에 64억원을 지원하여, 16~21년 이상의 노후어선 617톤을 대체 건조하고 연료과다소모형 저효율 기관 11천 마력과 노후된 어선 35척의 장비·설비를 개량하였으며, 어선용 기계 등에 887대를 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고로 지원하였다.

2002년도에도 영세어업인의 어선, 기관, 장비 등 노후된 어로시설의 현대화 지위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62억원을 지원하여 소형 노후어선 대체 600톤, 기관대체 7천마력, 장비·설비 개량 10척, 어선용기계 공급 등 544대를 지원중이다.

나. 해면양식어업

해면양식어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의 재편에 따라 원양 및 연근해 어선어업의 생산여건 악화로 감산이 예상되는 수산물을 양식어업 육성을 통하여 보전 생산하고자 2001년에 이어 새로운 양식어장을 확대개발하고 양식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생산 기반 조성 과 양식어업 경영안정에 주력하였다.

2002년에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양식어장 개발에 총 237억원을 지원하여 환경과 관광 등이 연계된 대형양식단지 4개소를 조성하고, 어류양식장 20개소와 내파성 가두리 양식장 5개소, 전복·가리비 등 고소득 양식어장 40ha를 새로이 개발하여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전복, 바지락 등 290ha의 마을어장을 생산성이 높은 양식어장으로 개발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지선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또한, 양식기반 시설확충을 통한 양식어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양식어업 기반시설에 109억원을 지원하여 어·폐류 종묘생산 시설 15개소, 사료저장시설 10개소, 개량부자 282천개, 야간점등부자 3천개 등을 지원중이다.

그리고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연 1회 이상 전 어업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관리 어업권을 정비하고, 새로운 양식품종 및 기술 보급과 어장의 단위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국 어촌에 상주하고 있는 수산기술관리공무원을 활용, 적정시설 지도와 함께 어장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양식어장 평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점차 악화되고 있는 어장환경을 개선·보전하기 위하여 243억원을 지원하여 13천ha의 연안어장과 4개소의 특별관리 어장에 대한 어장바닥갈이, 오·폐물수거 등 어장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다. 내수면양식어업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원 개발과 정부의 맑은 물 공급시책에 부응한 환경친화적인 양어장 시설을 위하여 첨단양식단지 조성, 담수어 양어장시설사업(대형 및 소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6,500백만원(7개소)을 지원한데 이어 2002년도에는 8,400백만원(8개소)을 확보하여 토산어종은 물론 고부가가치 어종인 뱀장어 등을 양식할 수 있는 집약생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라. 원양어업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주요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조치로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과 베링공해, 북대서양수산기구(NAFO)수역 등의 주요어장이 상실되고, 입어료 및 어로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원양 정책자금을 2002년에 4,150억원(영어자금 1,150, 해외자원생산자금 3,000)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간 어업협정을 통해 양자간 어업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연안국들과는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자원을 보유한 기니아, 세이셸 국가등과도 새로운 어업협력을 통하여 해외어장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입어대상국 등을 대상으로 현지투자·합작 등 상호 호혜적 입어를 적극 추진하여 장기적인 해외어장 및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주요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강화로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는 물론 어업규제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 어업에 대하여는 원양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8~1999년도에는 북해도 트롤어선 6척, 2000년~2002년에는 콩치 봉수망 7척을 감척 완료하였으며, 2002년에 콩치봉수망 어선 3척과 오징어채낚기 어선 2척을 감척하고자 61억을 확보하여 감척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에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3척을 감척하고자 예산 38억을 확보하였다.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기초생활환경 개선

가. 현대적 생활환경을 갖춘 문화마을 조성

면 지역의 중심마을에 마을기반시설, 주택신축, 복지·문화 및 환경보전 시설 등을 갖추어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가면서 생산기반, 유통, 가공시설사업과도 연계시켜 나갈 계획으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53개 지구를 착수하여 122개 지구를 완료하고, 2002년에는 526억원을 들여 19개 지구를 신규로 착수하여 15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10년간 4조원 지원

노후되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정주기반조성을 위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4조원을 지원하여 매년 25천호씩 25만호를 개량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까지 19,310억원을 지원하여 114,075동을 개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840억원을 지원하여 9,200동의 주택개량을 추진중에 있다. 1998년부터 IMF 영향으로 인한 정부예산 지원의 감소로 당초 계획된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으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어촌주택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총소요액	1995까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이후
농어촌주택개량 (농특세)	40,000 (8,000)	4,000 (1,200)	4,000 (800)	4,000 (800)	2,020 (680)	2,040 (408)	1,550 (388)	1,700 (360)	1,840 (360)	18,850 (3,004)

다. 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추진

지방양여금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제정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994년 7월 ~ 2004년 6월말까지 10년간 농어촌지역에 투자되는 농어촌특별세 총 15조원중 1조 2천억원을 농어촌도로에 투자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당초 2004년까지 4조 4,210억원(지방양여금 2조 630억원, 지방비 1조 1,580억원)을 투자, 17,168km의 농어촌도로를 정비하여 포장률을 2000년말 27%에서 2004년까지 45% 수준으로 신장할 계획이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1994~2004년)〉

사 업 명	합 계	1994~1998	1999	2000	2001	2002	2003~2004
사업량(km)	17,168	5,515	517	599	827	541	9,170
사업비(억원)	44,210	17,185	3,580	4,223	5,793	4,319	9,110

※ 재원별(억원) : 농특세 1조 2,000억원, 양여금 2조 630억원, 지방비 1조 1,580억원

라.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의 수자원 절약과 수질오염 방지 등 농촌에 적합한 자연발효형 친환경 화장실을 개발하여 2001년도에 전국 420농가에 시범·보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마을 공공장소나 하우스단지 등에 설치 할 수 있는 친환경 공동 화장실을 개발, 전국에 157개를 설치 활용하고 있다. 금후에도 화장실 사용 평가결과에 따라 보완된 제품이 전국에 보급되어 깨끗한 농촌환경을 보존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

상수원 오염과 수량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주민에게도 도시지역 주민과 같이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1994~

2004)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면지역 자연마을에 압반 관정을 개발하여 2001년까지 총 5,471억원을 투자하여 3,351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2002년도에는 816억원을 투자하여 480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2004년까지 8,000억원을 투자하여 총 5,000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1년까지 총 1,744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 7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2년도에는 총 480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28개소를 포함하여 71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2004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자하여 215개 사업을 추진,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5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바.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사업

농어촌의 생활하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1995~2001년까지 1,411개 마을에 2,822억원을 지원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2002년에는 602억원을 지원하여 219개 마을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1995~2001년까지 오염소하천 392km를 정비하였으며, 2002년에는 320억원을 투입하여 66km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반대 등으로 광역매립지 조성이 곤란한 농어촌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을 연계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1995~2004)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에는 신규사업으로 13개사업을 추가하는 등 2004년까지 총 2,040억원을 투자하여 79개 지역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소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배출하는 각종 오·폐수를 BOD 30ppm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1년까지 557억원을 투자하여 88개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바 있고, 2002년에는 14억원을 투

자하여 2개소(시설개선 포함)를 추진중이며, 앞으로 2개소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상수원 및 하천주변에 밀집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991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1997년부터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2001년까지 3,442억원(지방비포함)을 투자하여 37개소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2002년에는 24개소(신규15개소)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처리률 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질소·인 제거설치, 공법개선, 저류조·유량조정조 확대 등 시설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시설이 적정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2. 교육여건 개선

가. 농어촌학생 대학입학기회 확대

(1)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실시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주민의 고등학생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은 2002년 현재 입학정원의 3%로, 대상범위는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생 및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지역이 된 학생에게도 특별전형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1996~2002년까지 등록자 : 100,862명
- 2003학년도 선발예정자 : 19,215명(일반대 10,607명, 전문대 8,608명)
- 337개 대학 : 일반 182개교, 전문 154개교

(2) 농어촌지역에 전문대학 설립

농어촌지역의 전문대학 설립요구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고교를 개편, 8개 공립전문대학을 설립하여 개교하였다.

- 1996년도 : 거창, 남해,
- 1997년도 : 경도
- 1998년도 : 강원 전문, 충북 과학, 청양, 담양,
- 1999년도 : 남도전문대학

나. 농업인 자녀교육비 부담경감

(1)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 및 조부모 등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중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0~2001년까지 5,460억원(1,411천명)을 지원 하였고, 2002년도에는 396억원(52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해 설치된 자영농과 고등학교 재학생 중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에게 1986년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141억원(26천명)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16억원(2,0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새마을장학금 지원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후 영농에 종사할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1979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66억원(55천명)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2,900명에게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02년도 농어업인 자녀교육비 지원계획 〉

구 분	실업고생 학자금	자영농과생 급식비	새마을장학금
인 원	52천명	2,050명	2,500명
금 액	396억원	16억원	4억원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기존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과 병행하여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 2,1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학기 당 15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상환은 졸업 후 1년 거치, 융자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에 균등상환 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까지 1,384억원(133천명)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 10월 현재 16,572명에 대해 237억 6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라. 농어촌 출신 학생 기숙사 건립

농어촌출신 도시유학생 숙식비 절감, 면학분위기 조성과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1995년부터 각 도(道) 단위 1개소(9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건립규모는 연건평 2,000평 규모로 3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관,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출신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도모하게 될 것이다.

2001년도까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개소는 개원·운영 중에 있고, 경기 및 강원도는 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다.

마.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농어촌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각종 문화 및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토록 하여 농어촌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적 욕구 충족 및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1995~2004년까지 총 100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1995~2002년까지 50개관(240억원)을 건립하였다. 또한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총 100억원의 장서구입비 지원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1995~2002년까지 78억원을 지원하였다.

2003년도에는 7개 도서관에 각 5억원씩 35억원의 건립비와 도서 구입비로 188개관에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가.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과, WTO체제 출범 및 UR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써의 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75. 7. 1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 시행 성과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제도는 2002년 7월말 현재 가입자수는 200만명(농어업인 44, 비농어업인 88, 납부예외자 68만명)으로 정착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1995년부터 최저등급 보험료의 1/3(4,400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 부터는 지원액을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연금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총소요액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이후
6,753	455	672	653	616	579	616	630	2,532

다.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례노령연금 및 유족·장애연금 등의 연금수급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제도 및 선납·분기납제도 등 납부편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연금제도가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1)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들이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액 경감연령을 2000년부터 종전의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 건강검진 실시 및 급여기간 연장

농업인 등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보험급여 확대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세대주 및 40세 이상인 세대원에 대하여 1995년부터 당뇨·고혈압·간기능장애 등 성인병에

대해서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보험급여기간을 1998년 300일에서 1999년 330일로 연장하였고, 2000년부터는 365일 연중 급여를 받게 되었다.

(3) 농어촌지역 의료보험료 경감 확대

2000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지역가입자(농어민 포함)는 15%, 직장가입자는 20%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농어민가입자에 대해서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감비율을 보험료액의 22%(종전 15%)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5.5% 인상토록 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농·어촌지역중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1994년~2004년까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4,785억원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2001년까지 430개소에 2,793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2년도에는 211억원을 확보하고 86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2003년도는 211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2)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 확대

1981년부터 농어촌, 도서지역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1,900여개의 보건진료소 설치 및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여 경미한 수준의 진료와 가정방문보건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교통수단 및 의료시설 등이 미흡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확대

1998년 공중보건한의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1년까지 128명의 한방공중 보건의를 배치·운영하였으며, 병역법 개정(2000.12.26)으로 한의사면허 소지만으로 공중보건의를 편입이 가능함에 따라 2002년에는 편입인원이 274명으로 대폭 증원되어 현재 전국에 334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어 농어촌지역에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03년에는 390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신규로 편입되어 총 70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농어촌의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2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시행내용보고서

2002년 12월 일 발행

2002년 12월 일 인쇄

발행 : 대한민국정부

편집 : 농림부 농업정책과

인쇄 : 대양출판사 ☎ 031)425-4422

<비매품>